KINU 정책연구시리즈 13-10

NORTH KOREA STRATEGY PEACE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국내불안과 대외도발:
북한에 대한 적용 가능성 탐색

정성철

KINU 통일연구원

KINU 정책연구시리즈 13-10

NORTH KOREA STRATEGY PEACE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국내불안과 대외도발: 북한에 대한 적용 가능성 탐색

정성철

KINU 통일연구원

국내불안과 대외도발: 북한에 대한 적용 가능성 탐색

인 쇄	2013년
발 행	2013년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통일정책연구센터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8 (팩시밀리) 901-2572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아미고디자인 (02-517-5043)
인 쇄 처	아미고디자인 (http://www.amigodesign.co.kr)
I S B N	978-89-8479-756-7 93340
가 격	비매품

ⓒ 통일연구원, 2013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타 • 매장 : 734-6818 • 사무실 : 394-0337

국내불안과 대외도발:
북한에 대한 적용 가능성 탐색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차 Contents

요 약 vii

Ⅰ. 서론 1

1. 연구질문 3
2. 연구방법 5
3. 주요내용 9

Ⅱ. 이론적 논의 11

1. 전쟁과 평화 연구 13
2. 관심전환이론의 발전과 동향 20
3. 관심전환이론과 북한의 대남도발 27

Ⅲ. 통계모형의 구축 29

1. 관심전환분쟁모형 32
2. 분석 및 논의 46

Ⅳ. 북한의 대남도발 예측 55

1. 세력균형과 영토갈등 58
2. 무력도발 기대확률 62

Ⅴ. 결론 67

1. 요약 및 한계 69
2. 전망 70
3. 정책적 고려사항 72

참고문헌 77

최근 발간자료 안내 83

표목차
Table

〈표 Ⅱ-1〉 국제분쟁이론과 주요 변수 ····· 20
〈표 Ⅲ-1〉 방향성을 가진 국가쌍-연도 사례 ····· 31
〈표 Ⅲ-2〉 MID 데이터에 따른 남북한 무력분쟁, 1993~2001 ····· 36
〈표 Ⅲ-3〉 변수의 측정과 예상 영향 ····· 43
〈표 Ⅲ-4〉 기술통계 ····· 45
〈표 Ⅲ-5〉 로짓분석 Ⅰ, 1945~2001 ····· 48
〈표 Ⅲ-6〉 로짓분석 Ⅱ, 1945~2001 ····· 51
〈표 Ⅲ-7〉 로짓분석 Ⅲ ····· 53
〈표 Ⅳ-1〉 세력균형변화와 북한의 대남 도발 가능성 ····· 60
〈표 Ⅳ-2〉 잠재적 개시국(A)의 잠재적 타겟국(B)에 대한 분쟁개시 기대확률 ····· 63

그림목차
Figure

〈그림 Ⅳ-1〉 한계영향: 잠재적 분쟁타겟국(B)의 국력상승 변화 ····· 59
〈그림 Ⅳ-2〉 한계영향: 잠재적 분쟁타겟국(B)의 분쟁영토점유 유무 ····· 61
〈그림 Ⅳ-3〉 무력도발의 기대확률 ····· 63

요 약

KINU 정책연구시리즈 13-10

국내불안과 대외도발: 북한에 대한 적용 가능성 탐색

본 연구는 1945년부터 2001년까지 약 200여 국가들의 무력분쟁에 대한 통계분석을 통하여 북한의 대남 도발 가능성을 예측하고자 하였다. 먼저 국내불안과 대외도발의 상관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국내정치불안정을 겪고 있는 국가는 무력위협, 무력과시, 무력사용, 전쟁과 같은 도발을 개시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국내정치불안정국가는 특히 상대적 국력이 상승하는 국가 혹은 분쟁영토를 실효지배하고 있는 국가에 대하여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더욱 높다. 셋째, 국내정치적으로 안정적인 국가는 상대적 국력이 상승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오히려 도발을 덜 일으킨다. 넷째, 모든 국가는 분쟁영토를 실효지배하는 국가를 상대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가능성은 국내정치가 불안할수록 더욱 높아진다.

이러한 발견은 북한의 대남 도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전망을 제시한다. 첫째, 북한 지도부는 국가이익보다 정권이익을 우선시하여 무력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어떤 이들은 북한정권을 비이성적 결정을 내리는 예측 불가능한 집단으로 치부하지만 권력세습과 경제실패로 정당성 확보가 어려운 김정은 정권에게 외부의 적을 통한 국내세력 결집은 아주 매력적인 정권유지 전술임에 틀림없다. 둘째, 정치불안과 경제실패의 북한 국내 환경이 심화될수록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치불안과 경제실패 속에서 북한 지도부가 점차로 강해지는 남한이라는 타겟을 상대로 분쟁을 일으켜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며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증명하고자 할 유인이 크다. 셋째, 현재의 남북 세력균형이 변하기보다는 유지될 수도 있겠지만 북한의 정치불안이 계속되는 한 북한의 대남 도발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미중 사이의 전략적 경쟁 속에서 북중관계가 개선되어 북중무역량과 중국의 대북한 원조가 증가할 수도 있으며, 남한의 경제성장이 국내외적 요인으로 더디 이루어져 냉전 직후 남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한

남북한 세력균형이 현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북한의 정권안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북한지도부가 대남 도발 카드를 접으리라고 보기는 힘들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세 가지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한다. 첫째, 도발 가능성을 상정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 무엇보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응징을 가할 우리의 의지와 능력을 명확히 보여야 한다. 북한 지도부와 군부가 국내적 관심을 외부로 돌리면서 외교적 전과를 이루려고 한다해도 고강도 분쟁은 회피하고자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에 대하여 무력분쟁의 개시의 비용과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다는 명확한 신호를 사전에 보내는 작업을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북한의 정치와 경제 상황이 종합적으로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고려해야 한다. 김정은 정권이 내세운 병진론은 '총'과 '버터'를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전략이지만 체제 개혁과 개방 없이 경제성장이 어렵다는 것을 고려할 때 '총'을 통한 대내결집 노력은 중단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북한의 정치와 경제 상황을 연계하여 고려하면서 이들의 상호작용이 북한의 외교 전략에 어떻게 반영될지를 검토해야 한다. 셋째, 북한 지도부가 중국의 지원과 국제사회의 압력 속에서 전략적으로 취할 도발 유형을 예상해야 한다. 당분간 북한은 무력사용을 통한 고강도 분쟁보다는 위기조성에 머무르는 저강도 분쟁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북한이 실질적 무력사용 뿐 아니라 무력위협과 사이버 테러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도발에 대한 전략적이고 면밀한 준비가 요구된다.

주제어: 북한, 국내불안, 대외도발, 남한, 도발, 분쟁

Ⅰ. 서론

KINU 정책연구시리즈 13-10

국내불안과 대외도발: 북한에 대한 적용 가능성 탐색

1. 연구질문

본 연구는 북한의 대내불안정이 대외도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과연 북한의 대내불안정의 증가 혹은 감소가 남한에 대한 무력 도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김정일 정권은 2009년 초에 김정일의 후계자로 김정은을 공식화한 이후 2010년에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과 같은 한국전쟁 이후 유례없는 대남 무력도발을 감행하여 불안한 세습체제의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1년 12월 김정일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김정은 체제가 등장하자 많은 전문가들은 30대 초반의 준비되지 않은 젊은 지도자가 공격적인 대외정책을 취할 것으로 예상하였다.[1] 일부에서는 해외유학을 경험한 김정은이 개혁과 개방을 시도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도 하였으나 북한은 2012년 말부터 장거리 미사일 발사, 제3차 핵실험, 개성공단의 일방적 중단, 탈북청소년 강제북송, 이산가족 상봉의 연기를 통하여 남북관계를 경색시켰다. 더구나 북한내 권력 2인자였던 장성택의 숙청과 처형 소식이 전해지자 김정은 정권의 불안전성과 더불어 북한의 대남도발과 남북관계에 대한 다양한 관측들이 제기되고 있다.[2] 실제로 2013년 12월 19일 북한 국방위원회는 자신들의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이 반복될 경우 '예고없이 대남 보복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3]

1- 최진욱·한기범·장용석, 『김정은 정권의 정책전망: 정권 초기의 권력구조와 리더십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12-12 (서울: 통일연구원, 2012), pp. 1~175.

2- 박영호, "남북관계의 현황과 전망: 2013-2014," 『남북관계의 진단과 해법』 (국회정책세미나, 2013.12.20); 박형중, "김정은 정권 2년과 장성택 실각, 그리고 2014년 북한 정세," 『남북관계의 진단과 해법』 (국회정책세미나, 2013.12.20); "김정은 기반 약한데 '장성택 공백', 북 내부, 작은 충격에 폭발할 수도," 『조선일보』, 2013년 12월 12일.

3- 『연합뉴스』, 2013년 12월 20일.

북한의 대내불안정은 어느 정도 대외도발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는가? 많은 이들이 김정은 정권이 국내세력결집을 위하여 대외도발을 감행한다는 예측을 내놓고 있지만 정보의 제한과 데이터의 부재라는 북한연구의 특수성으로 이러한 사실이 경험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다. 만약 북한의 대내불안정이 과거 대외도발을 일으키는 요인이었다고 하더라도 대외도발을 일으키는 다른 요인들에 대한 분석이 없다면 향후 북한의 대외도발을 예측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예를 들어, 북한이 심각한 대내불안을 겪더라도 다른 요인들이 동시에 북한의 대외도발을 억제한다면 북한의 대외도발 가능성은 낮을 수 있다. 반대로 북한 정권이 안정기에 접어들었지만 대외도발을 유발하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면 북한은 대외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은 높다. 즉, 북한의 대내불안정이 대외도발을 일으키는 충분 혹은 필요조건이 아닌 이상 대내불안정에만 기반 한 대외도발 예측은 한계가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① 국내 불안정과 더불어, ② 세력균형의 변화, ③ 정치체제(민주주의-비민주주의), ④ 경제의존에 기초하여 북한의 대외도발 가능성을 예측하고자 한다. 이들 요인들이 과연 대외도발을 일으키는 영향이 있는지, 만약 그러하다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예측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들 네 가지 변수들은 다양한 대북한 전략들과 깊은 상관이 있다. 북한의 대내불안정과 남북 세력균형은 압박과 대화, 봉쇄와 개입 전략과 경제의존은 남북한 경제협력 전략, 정치체제는 북한 체제변환과 민주화 전략의 효용과 한계에 대한 논의와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변수와 대외도발의 상관성에 대한 경험적 분석은 한국의 대북전략 수립에 주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들 변수들을 동시에 고려한 북한의 대남도발 예측은 이들이 주요 변수로 작용한다고 볼 때 보다 정확한 예측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일반이론을 활용하여 통계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 가능성을 예측하고자 한다. 본문에서 분쟁 이론을 검토하고 분석 모델을 도입하기 전에 이론과 사례, 그리고 통계분석에 대한 소개를 통하여 연구방법의 정당성을 논하고자 한다.

가. 일반이론과 북한연구

일반이론은 무엇인가? 반 에베라(Stephen Van Evera)에 따르면 이론은 '인과 법칙 혹은 인과 가설로서 A와 B의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을 포함(a causal law or a causal hypothesis, together with an explanation of the causal law or hypothesis that explicates how A causes B)'한다.[4] 즉, 이론은 다양한 사례 속에서 두 변수의 인과관계에 대한 일반화를 통해 구축된다. 이러한 이론 혹은 모델은 과거와 현재에 대한 '묘사(description)'와 '설명(explanation),'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측(prediction)'을 가능하게 하는 효용성을 지닌다.[5] 물론 이론의 뒷받침 없이 특정 사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할 수는 있으나 연구자는 무의식 중에 일반이론에 기반한 분석을 시도하거나 일반화를 시도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연구자는 자료의 제한과 자신의 관점에 의해 자신이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과 관련한 수많은 요인들 가운데 몇 개에 집중하여 자신만의 설명을 내놓는다. 물론 일반화의 정도와 인과(causation)

4- Stephen Van Evera, *Guide to Methods for Students of Political Scienc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7), p. 9.

5- J. David Singer, "The Level-of-Analysis Problem in International Relations," *World Politics,* Vol. 14, No. 1 (1961), pp. 78~80.

와 구성(constitution)의 중요성을 놓고 연구자들은 서로 다른 선호와 견해를 보이지만 일반이론의 무용성을 주장하는 이들은 찾기 힘들다.[6]

일반이론의 장점 중 하나는 바로 예측력이다. 위에서 언급한데로 일반이론에 기초하여 과거와 현재 사건을 설명하고 이해시킬 수 있지만 다양한 사료가 발굴되고 증언이 확보되는 경우 단순한 인과관계의 발견보다는 복합적 상호관계를 밝히는 조망이 실시되기 마련이다. 한국전쟁의 경우 냉전이 종식되고 구소련과 동구권, 그리고 중국의 자료와 증언이 공개되고 전통주의와 수정주의간의 논쟁이 종식되면서 입체적인 이해가 가능하게 되었다. 쿠바 미사일 위기의 경우 당시에는 미국과 소련 사이의 합리적 결정으로 이해되었지만 이후 양국 지도부의 결정과 관련된 자료들이 확보되면서 역사가들은 관료정치와 조직과정에 기반 한 풍부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7] 특히 과거 사례를 단순히 '설명(explanation)'하기 보다 종합적으로 '이해(understanding)'하기 위한 작업의 경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인과관계에 대한 일반이론의 필요성은 높지 않다.[8] 반대로, 미래의 사건이나 충분한 자료의 확보가

6- 사회과학연구의 두 흐름, "자연주의"(naturalism)와 "구성주의"(constructivism)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요나톤 모세스 · 투르뵨 크누트센, 신욱희 외 역, 『정치학 연구방법론』 (서울: 을유문화사, 2011). 일반화와 인과관계에 대한 역사학과 정치학의 입장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리처드 에번스, 이영석 역, "제2장: 역사, 과학, 도덕," 『역사학을 위한 변론』 (서울: 소나무, 1998); 존 루이스 개디스, 강규형 역, 『역사의 풍경』 (서울: 에코리브르, 2004); Colin Elman and Miriam Fendius Elman (ed.), *Bridges and Boundaries: Historians, Political Scientists, and the Study of International Relations* (Cambridge: MIT Press, 2001).

7- 예를 들어, 쿠바미사일 위기를 분석한 앨리슨(Graham Allison)의 *Essence of Decision*은 1971년에 출판되었으나 냉전 이후 새로운 사료들이 공개되었고 앨리슨은 역사학자 젤리코프(Philip Zelikow)와 1999년에 수정판을 출판하였다. Graham T. Allison and Philip Zelikow, *Essence of Decision: Explaining the Cuban Missile Crisis* 2nd ed. (New York: Longman, 1999(1971)).

8- 국제관계 연구의 "설명"과 "이해"의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Martin Hollis and Steve Smith, *Explaining and Understanding International Relation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어려운 과거 혹은 현재의 사례는 일반이론의 도움으로 예측과 설명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미국과 일본, 독일과 프랑스의 미래를 전망할 때 두 민주국가 사이에서 전쟁이 없다는 민주평화론은 양국이 최소한 제2차 대전과 같은 전쟁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경제성장이 민주화를 촉진시킨다는 근대화이론은 독재국가에 대한 경제지원의 명분이 되기도 하였다.

더구나 다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의 접근과 데이터의 생산이 어려운 북한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일반이론을 동원한 북한연구는 유용할 수 있다. 물론 북한의 인물과 조직, 정책과 제도에 대한 면밀한 고찰을 통하여 북한의 현재를 이해할 뿐 아니라 미래를 전망하는 작업은 가능하다. 다만 북한의 대남 도발과 같은 이슈의 경우 최고 지도자의 인식과 의지, 군·당·정 엘리트의 동학과 이권, 대중의 불만과 연계와 관련된 정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한 종합적 예측이 사실상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그러기에 과거 다른 국가들의 도발 사건들을 분석하는 작업을 통하여 일반적인 패턴을 발견하고 이를 통하여 북한의 향후 도발 가능성을 예측하는 작업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9] 비록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다른 나라의 건강관련 연구조사 결과라 할지라도 우리가 유심히 듣고 참고하는 이유는 다른 나라 사람들 사이에서 발견한 법칙 혹은 경향이 나를 포함한 우리나라 사람

9- 릭라이더(Roy Licklider)는 많은 수의 변수를 통하여 소수 사례를 파악하는 방법을 "지혜"(wisdom), 적은 수의 변수를 통하여 다수 사례를 설명하는 방법을 "과학"(science)으로 명하면서, 전자는 연구자의 "전문화"(specialization)를 통하여 가능하며, 후자는 연구자가 "일반화"(generalization)를 추구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Roy Licklider, "How Do We Know What We Know?" in Edward Rhodes and Jonathan DiCicco (eds.), *International Relations: Introductory Readings*, third revised printing (Dubuque, Iowa: Kendall/Hunt Publishing, 2006), pp. 347~358.

들에서도 존재하리라는 믿음 때문이다. 이처럼 북한이라는 블랙박스의 행동을 예측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들 사이에서 행동의 패턴을 파악하는 작업은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여 줄 수 있다.

특히 다변량 통계 분석은 연구 대상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는 것을 통하여 정확하고 유용한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A국가의 B국가에 대한 무력 도발의 경우 무력 도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다. 양국이 국경을 접하고 있다면 도발 가능성이 높겠지만, 양국이 군사 동맹 관계라면 도발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 A국이 B국가와의 무역을 통한 이익이 작다면 도발 가능성은 높겠지만, A국의 B국에 대한 상대적 국력이 뒤떨어질수록 도발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 이렇듯 예측하고자 하는 대상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는 작업은 정확한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동시에 다양한 설명변수들을 고려하는 것을 통하여 현실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거나 변하고자 하는 변수의 변화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엄밀히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수면시간과 건강 사이의 상관관계를 밝혔다하더라도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음식, 운동, 나이, 주변환경과 같은 다른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일반인들이 실생활에서 수면시간의 변화가 건강에 미칠 영향을 정확히 예측하기 힘들다. 따라서 설명변수(수면시간) 이외에 종속변수(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제변수(음식, 운동, 나이, 주변환경)로 활용한 통계모델은 보다 의미있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3. 주요내용

제Ⅱ장에서는 무력도발과 관련된 이론적 논의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쟁과 평화와 관련된 다양한 수준의 이론들을 살핀 후 국내 불안정과 국제 분쟁에 주목하는 관심전환이론의 발전과 동향을 논의한다. 제Ⅲ장에서는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통계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1945년부터 2001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국가들이 보여준 무력도발패턴을 분석한다. 특히, 국내 불안정, 세력균형, 민주화, 경제의존이 한 국가의 다른 국가에 대한 무력도발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다. 제Ⅳ장에서는 위의 통계모형을 이용하여 북한의 대남 무력 도발 가능성을 예측하고자 한다. 현재 북한과 남북관계를 고려하여 지리적 조건을 비롯한 통제변수들에 일정한 값을 부여한 후 북한의 불안정을 비롯한 몇 개의 상황변수들의 변화에 따라 북한의 대남 무력 도발 가능성을 산출한다. 제Ⅴ장에서는 연구의 내용과 한계를 논의한 후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국가의 정치불안정이 무력도발 행위를 일으키는 주요 요인임을 밝혀내면서 동시에 잠재적 분쟁타겟국의 상대적 국력의 상승과 분쟁영토의 점유가 이러한 영향을 강화시킨다는 것을 밝힌다. 따라서 북한의 정치불안과 경제실패, 남북한 세력균형의 변화를 고려할 때 북한의 대남 도발 가능성은 높으며 이에 대한 우리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북한의 도발에 대하여 단호히 응징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하여 오판에 의한 무력도발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북한지도부는 대남 도발을 통하여 국내 결집 효과를 노리고 있지만 동시에 중국을 비롯한 외부의 압력 역시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은 고강도 분쟁보다는 저강도 분쟁을 통하여 반복적인 위기상황을 추구할 것으로 예측된다.

Ⅱ. 이론적 논의

KINU 정책연구시리즈 13-10

국내불안과 대외도발: 북한에 대한 적용 가능성 탐색

국가는 왜 전쟁을 하는가? 언제 국가는 다른 국가를 상대로 분쟁을 일으키는가? 양차 대전 이후 국제정치학이 등장하면서 전쟁과 평화는 고전적 연구 주제였다. 냉전기에는 국제체제 수준의 변수들에 주목하는 소위 제 3의 이미지 이론이 주류를 이루었다면, 탈냉전기에 들면서 국가/사회와 개인 수준의 변수들에 주목하는 제 1, 2의 이미지 이론들이 각광을 받기 시작하였다.[10] 본 장에서는 먼저 전쟁과 평화와 관련한 다양한 이론들을 개관하고, 국내 불안정에 집중한 관심전환이론의 발전과 동향을 살펴본 후 북한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탐색해 본다.

1. 전쟁과 평화 연구[11]

가. 체제수준 연구(system-level approach)

한 개인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하여 개인적 요소들을 살펴보고 동시에 개인을 둘러싼 환경을 살펴본다. 이처럼 국가간 전쟁, 국가의 무력도발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국가 고유의 특성 보다는 국제체제의 성격에 집중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제1차 대전 이후 학자들은 어느 나라도 세계대전을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과연 국가들을 대규모 무력분쟁으로 내모는 체제수준의 원인들에 대하여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러한

10- 월츠(Kenneth Waltz)는 국제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개인 국가, 체제 수준에 존재한다고 보고 각각의 수준을 제1, 2, 3의 이미지로 명했다. Kenneth N. Waltz, *Man, the State, and War: A Theoretical Analysi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9).

11- 보다 광범위하고 자세한 전쟁과 평화 이론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Jack S. Levy and William R. Thompson, *Causes of War* (Malden, Massachusetts: Wiley-Blackwell, 2010); Manus I. Midlarsky (ed.), *Handbook of War Studies II*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0).

연구들에 의해서 가장 강조한 요인들로는 세력균형, 세력전이, 상호의존이 있다. 아래에서 상술하는 바와 같이 국제정치의 무정부성(anarchy)과 국가의 생존(survival)을 위한 자조(self-help)를 핵심가정으로 내세운 현실주의자들은 세력균형과 세력전이에 주목하였다면, 국제정치에서 제도(institution)의 역할과 이익(interest)의 중요성을 강조한 자유주의자들은 상호의존의 영향을 연구하였다.

(1) 세력균형: 극의 수, 균형-불균형

유럽의 근대국가체제의 도입 이후 경험에 바탕을 둔 세력균형이론(balance of power)은 고전적 국제정치이론이다. 국가간 혹은 국가군간 힘의 균형이 무너졌을 때 국제체제가 균형을 찾아가는 경향이 있으며 국가는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 즉 자강과 동맹을 추구한다는 이론이다.[12] 냉전기에 접어들면서 소위 신현실주의자들에 의해 세력균형이론은 극(polarity)의 수와 안정성에 대한 이론으로 발전하였다. 월츠(Kenneth Waltz)는 다극체제보다 양극체제에서 안정성이 유지될 확률이 높다고 주장하였으며,[13] 미어샤이머(John J. Mearsheimer)는 불균형 다극체제(unbalanced multi-polarity)가 가장 불안정하며 균형 양극체제(balanced bi-polarity)가 가장 안정하다고 이론을 내세웠다.[14]

12- 세력균형이론의 대표적인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 Kenneth N.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Reading: Addison-Wesley, 1979). 세력균형이론의 발전과 비판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John A. Vasquez and Colin Elman, *Realism and the Balancing of Power: A New Debate* (Upper Saddle River: Prentice Hall, 2003).

13- Kenneth N. Waltz, "The Stability of a Bipolar World," *Daedalus*, Vol. 93, No. 3 (1964), pp. 881~909.

14- John J. Mearsheimer,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ew York: Norton, 2001), pp. 334~347.

이들에 따르면 양극체제는 다극체제에 비하여 국가간 의도와 능력에 대한 오인의 가능성이 낮고 강대국간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도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물론 이들에 대한 비판가들은 양극체제의 경우 힘의 균형이 깨졌을 경우 약한 세력이 동맹을 통한 균형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불안정성이 높다고 주장하지만, 냉전은 미·소 양국간 직접적인 무력 분쟁 없이 '긴 평화'를 유지하며 막을 내렸다. 냉전의 종식 직후 미국이 이끄는 단극체제에 대하여 신현실주의자들은 반미연합의 형성을 예상하며 냉전기보다 불안정성이 증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하지만 지난 20여 년간 미국을 견제하는 주요국들의 균형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면서 단극체제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공존하는 상황이다.[15]

(2) 세력전이

세력균형이론이 국제정치에서 국가간 동맹을 통하여 형성되는 국가군과 국가군 사이의 대립에 주목하였다면, 세력전이이론(power transition theory)은 패권국과 이에 대한 도전국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16] 근현대 유럽 사이에서 스페인과 네덜란드, 프랑스와 영국, 영국과 독일의 관계를 볼 때 패권국이 쇠퇴하고 새로운 강대국이 부상할 때 후

15-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의 안정성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Michael E. Brown et al. (ed.), *Primacy and Its Discontents: American Power and International Security* (Cambridge: MIT Press, 2009).

16- 세력전이이론의 주요 연구와 이에 대한 문헌연구로는 다음을 참조. A. F. K. Organski and Jacek Kugler, *The War Ledge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0); Ronald L. Tammen et al., *Power Transitions: Strategies for the 21st Century* (New York: Chatham House Publishers, 2000); Jonathan M. DiCicco and Jack S. Levy, "Power Shifts and Problem Shifts: The Evolution of the Power Transition Research Program,"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43, No. 6 (1999), pp. 675~704.

자가 전자에 대하여 전쟁을 통하여 현상변경을 취하고자 했던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즉 패권국과 다른 국가들 사이에 뚜렷한 힘의 격차가 존재할 때 패권안정이 유지되지만, 패권국이 그 힘을 잃어갈 때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세력과 변경하고자 하는 세력 사이에 패권전쟁이 발생한다는 이론이다. 하지만 20세기 초반 영국과 미국 사이에서 이루어진 평화로운 패권전이는 세력전이가 반드시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때문에 세력전이이론가들은 도전국의 기존 질서에 대한 불만족 정도와 패권국과 도전국 사이의 정치적·문화적 유사성과 같은 매개변수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세력전이이론은 패권국과 도전국이라는 지역 혹은 글로벌 차원의 강대국 관계에 대한 연구로 시작되었지만 비강대국 사이, 특히 라이벌 국가 사이의 세력전이로 확장되어 그 설명력을 인정받고 있다.

(3) 상호의존

상호의존론(economic interdependence)은 국가가 서로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할 때 갈등보다는 협력을, 분쟁의 확대보다는 분쟁의 해결이 보다 용이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국경을 넘나드는 무역과 투자의 확대로 국가의 상호의존은 점차 심화되어왔다. 이러한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국가는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경제적 협력을 선호하고 이러한 협력을 종식시키는 무력 행위를 부담스러워한다는 논의가 자연스럽게 등장하였다. 더구나 협력을 통한 이익의 창출은 반복되어 장기 전망에 영향을 미치며, 국제기구의 등장을 통하여 상호 감시와 처벌 및 제재가 가능한 상황은 왜 국가가 협력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논리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17] 물론 이러한 경제협력의 안보효과는 양국 사이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A국가의 B국가에 대

한 경제의존도와 A국가의 B국가에 대한 무력도발 가능성 사이에는 역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나. 국가/사회수준 연구(state-level approach)

체제수준 연구가 다른 환경에서 유사한 국가가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대해 묻는다면 국가/사회수준 연구는 유사한 환경에서 다른 국가가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대해 질문한다. 즉, 전자가 '밖에서 안으로(outside-in)'의 접근이라면 후자는 '안에서 밖으로(inside-out)'의 접근으로 국제정치와 외교정책을 설명하고자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국제정치학자들은 국가와 사회 수준의 변수들에 주목하였다. 그 중 민주평화론으로 대변되는 민주주의와 독재체제의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가장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관심전환이론에 대한 관심도 증가되었다.

(1) 민주평화론

흔히 칸트(Immanuel Kant)의 '영구평화론(perpetual peace)'에서 그 기원을 찾는 민주평화론은 민주주의 국가는 비민주주의 국가에 비하여 전쟁을 덜 선호한다는 입장에서 시작하였다. 전쟁의 편익은 지도자와 엘리트에게 집중되지만 전쟁의 비용은 전 국민들에게 분산되기 때문에 대중의 정치적 영향력이 큰 민주주의 하에서 지도자는 전쟁을 쉽사리 일으키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수준의 민주평화론은 민주주의 국가와 독재국가의 비교를 통한 경험적 증거를 찾

17- 상호의존론을 포함한 신제도주의적 시각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Robert O. Keohane, *After Hegemony: Cooperation and Discord in the World Political Economy,* first Princeton classic ed.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5(1984)).

을 수 없었고 대신 두 민주주의 국가 사이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국가쌍 수준의 민주평화론이 주목을 끌게 되었다. 실제로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 사이에서 천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낳은 대규모 무력분쟁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18] 민주평화론은 냉전기의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의 전략적 이익 공유에 의한 것[19]이라거나 시장경제체제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의 경제적 이익 공유에 따른 것[20]이라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하지만 아직까지 민주주의의 공유를 통한 평화적 영향력을 부정하는 명확한 증거는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대신 민주주의라는 제도와 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규범, 국민의 동의를 기반으로 정부의 전쟁수행 능력과 관련된 다양한 설명이 존재한다. 보다 자세히 언급하면,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와 국민은 다른 민주주의 국가를 존중하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무력 사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민주주의 지도자는 다양한 견제와 균형 속에서 무력 사용을 결정해야하기 때문에 두 민주주의 국가가 서로를 향해 무력 사용을 한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힘들다. 또한 국민의 동의와 합의를 중시하는 민주주의 국가는 전쟁이 발발하였을 경우 국내 인력과 자원의 동원이 수월하여 뛰어난 전투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펼치는 것을 꺼려할 수 있다.

18- 민주평화론의 대표적인 저작으로는 다음을 참조. John R. Oneal and Bruce Russett, *Triangulating Peace: Democracy, Interdependence,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New York: Norton, 2001).

19- Henry S. Farber and Joanne Gowa, "Polities and Peace," *International Security,* Vol. 20, No. 2 (1995), pp. 123~146.

20- Erik Gartzke, "The Capitalist Peac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51, No. 1 (2007), pp. 166~191.

(2) 관심전환이론

오랫동안 국내 정치·경제 불안정을 겪는 국가들은 다른 국가를 상대로 무력 분쟁을 일으키는 문제국가로 바라보는 인식이 존재했다. 국가의 지도자가 국내 불안정으로 자신의 정치 생명이 위협을 받을 경우 다른 국가의 위협을 과장하거나 위기 혹은 분쟁을 조장하여 국내결집 효과를 노린다는 것이 관심전환이론(diversionary theory of war)의 핵심이다.[21] 국가를 하나의 단일 행위자로 보기보다 국가내 존재하는 지도자와 엘리트, 지도자와 대중의 관계에 주목하면서 지도자로 하여금 무력 사용을 조장하게 하는 국내정치적 요인들에 주목하는 이론이 바로 관심전환이론이다. 다음 절에서 상술하다시피 다양한 논리적·경험적 비판 속에서 1990년대부터 보다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국내불안정이 국제분쟁으로 연결되는 다양한 국내외적 조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표 Ⅱ-1>은 위에서 살펴본 체제와 국가/사회 수준의 이론들이 강조하는 국제분쟁과 무력도발 관련 변수들과 예상되는 영향을 정리하고 있다. 양극체제, 경제의존, 민주주의는 국가의 무력 사용을 제어하는 경향이 있지만, 국가(군)간 세력불균형, 세력전이, 국내 불안정은 국가의 무력 사용을 부추기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변수들에 주목하는 이론들은 서로를 부정하기 보다는 상호보완하며 국제분쟁의 종합적 이해를 돕는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국가간 상호의존이 국제 분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현실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 사이의 논쟁에서 볼 수 있듯이 각 변수의 영향력 정도와 적용 범위에 대한 다른 시각들이 존재하지만 위에서

[21] 관심전환이론에 대한 문헌연구로는 다음을 참조. Jack S. Levy, "The Diversionary Theory of War: A Critique," in Manus I. Midlarsky (ed.), *Handbook of War Studies* (Boston: Unwin Hyman, 1989).

살펴본 국제분쟁 관련 변수들은 대부분의 국제분쟁 연구들이 주요 변수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다.[22]

표 II-1 국제분쟁이론과 주요 변수

이론	변수	무력도발에 미치는 영향
세력균형	양극체제(↔다극, 일극)	부정적(-)
	국가(군)간 불균형(↔균형)	긍정적(+)
세력전이	국가간 세력전이	긍정적(+)
상호의존	다른 국가에 대한 경제의존	부정적(-)
민주평화론	민주주의 국가쌍	부정적(-)
관심전환이론	국내 불안정	긍정적(+)

2. 관심전환이론의 발전과 동향[23]

가. 논리적 비판

관심전환이론은 다양한 역사적 사례를 통하여 분석적 유용성을 인정받았다. 포클랜드 전쟁의 경우 아르헨티나 군부가 과거 인권 유린과 경제 개혁 실패로 국내적 반발에 직면한 상황에서 영국이 지배하고 있

22- Stuart A. Bremer, "Dangerous Dyads: Conditions Affecting the Likelihood of Interstate War, 1816-1965,"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36, No. 2 (1992), pp. 309~341.

23- 관심전환전쟁이론 연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문헌연구로는 다음을 참조. 정성철, "관심전환전쟁이론: 논리와 근거,"『한국정치학회보』, 제47집 5호 (2013).

는 포클랜드 섬을 무력으로 점령하는 것을 통하여 하룻밤 사이 국내 청중의 지지와 환호를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제1차 대전의 발발 이전 독일과 러시아를 비롯한 대부분의 유럽 열강들은 내부적으로 이념적·계급적 갈등 속에서 국내분열의 해결책을 외부에서 찾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존재했다. 냉전 이후 북한의 핵개발로 대표되는 공세적인 외교정책 역시 흔히 정치권력의 세습과 경제정책의 실패 속에서 국내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방안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관심전환이론은 다수 사례에 대한 통계분석 연구를 통하여 제한적 지지만을 받았다. 즉, 국내불안정에도 불구하고 적대적인 외교정책이나 무력 도발을 감행하지 '않는' 국가들의 존재가 상당 수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불안정이 국제분쟁을 야기한다는 일반화는 '신화(myth)'라는 입장이 대두되었다.[24] 심지어 중국의 경우 소수민족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국내 불안정을 잠재우고자 한다는 관심전환이론을 전면적으로 반박하는 주장도 등장하였다.[25]

그렇다면 국내 불안정은 과연 국제 분쟁의 원인인가? 달리 말해 국내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지도자가 다른 국가에 대해 무력 사용을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는 ① 국가간 전략적 상호작용, ② 지도자의 복수 정책옵션, ③ 다른 국가의 기회주의적 도발이라는 세 가지 논리적 설명이 존재한다.[26] 첫째, 국내불안정에 시달리는 국가가 존재할 경우 다른 국가들은 불안정국가의 지도자가 무력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취하게 된다. 예를 들어, 새로운 동맹을 맺

24- James D. Meernik and Peter Waterman, "The Myth of the Diversionary Use of Force by American Presidents,"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Vol. 49, No. 3 (1996), pp. 573~590.

25- M. Taylor Fravel, *Strong Borders, Secure Nation: Cooperation and Conflict in China's Territorial Disput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8).

26- 정성철, "관심전환전쟁이론: 논리와 근거," pp. 392~394.

어 도발을 억제할 수 있으며, 불안정국가와 관계 개선을 유도하여 도발의 명분을 약화시킬 수 있다.

둘째, 지도자는 국내불안정을 해결할 방법으로 다른 국가에 대한 무력 도발 이외 국내 정치·경제 개혁을 시도하거나 국내 불만세력을 탄압하는 것을 통하여 자신의 지위와 파워를 유지할 수 있다. 더구나 국제 분쟁을 감행할 경우 단기적으로 국내 호응과 지지를 이끌 수 있지만, 분쟁이 장기화되고 상당한 인적·물적 비용을 초래하게 될 경우 국내 반발과 비판은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지도자는 개혁 혹은 탄압과 같은 국내 정책을 통하여 국내 불안정을 해소하는 저비용·저위험 전략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국내불안정 국가는 국제분쟁을 일으키는 개시자가 아니라 다른 국가가 일으키는 국제분쟁의 타겟이 될 수 있다. 만약 A라는 국가가 정치·경제 혼란을 겪고 있다면 무력분쟁이 일어날 경우 지도자의 지휘통제 능력과 동원해야 할 국내자원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다른 국가들은 이것을 기회의 창으로 여기고 A국가를 상대로 무력분쟁을 일으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할 수 있다. 국내불안정국가는 오히려 국제분쟁을 피하거나 억제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다.

나. 최근 연구동향

(1) 조건/매개변수의 영향

위의 논리적 비판 속에서 국제정치학자들은 국내불안정이 국제분쟁의 원인이 되는 조건변수들을 찾기 시작하였다. 모든 국제 분쟁이 국내 불안정을 원인으로 하지 않고, 모든 국내 불안정이 국제 분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과연 어떠한 환경 속에서 국내 불안정에 직면한 지도자가 국제 분쟁을 일으킬 확률이 높은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질문

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것이다. 미셸(Sara McLaughlin Mitchell)과 그녀의 동료들은 일정한 기간 다수의 무력분쟁을 경험하여 라이벌(enduring rivalry) 국가들 혹은 영토, 영해, 국경 문제를 두고 대립한 국가들 사이에서는 국내 불안정 증가가 곧 국가간 무력 분쟁으로 연결된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비우호적인 관계가 형성된 국가와 무력 분쟁을 일으켜 지도자는 국내불만을 잠재우고자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27]

상당수의 연구자들은 관심전환분쟁 개시자의 정치형태에 주목하였다.[28] 민주주의 제도가 확립되지 않았을 경우 외부와의 분쟁으로 국민결집효과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선거의 승리 혹은 호의적인 여론을 통하여 정치적 보상을 지도자가 받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성숙한 민주주의 혹은 정책의 책임 소재가 분명한 형태의(예를 들어, 소수 여당 정부) 민주주의 하에서 지도자는 관심전환전술을 활용하여 자신의 정치 생명을 유지하거나 국내 정치를 장악하고자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29] 비록 민주주의 지도자는 비민주주의 지도자에 비하여 외교

27- Sara McLaughlin Mitchell, and Clayton L. Thyne, “Contentious Issues as Opportunities for Diversionary Behavior,” *Conflict Management and Peace Science,* Vol. 27, No. 5 (2010), pp. 461~485; Sara McLaughlin Mitchell, and Brandon C. Prins., “Rivalry and Diversionary Use of Forc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48, No. 6 (2004), pp. 937~961.

28- Christopher Gelpi, “Democratic Diversions: Governmental Structure and the Externalization of Domestic Conflict,”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41, No. 2 (1997), pp. 255~282.

29- Emizet F. Kisangani, and Jeffrey Pickering, “The Dividends of Diversion: Mature Democracies’ Proclivity to Use Diversionary Force and the Rewards They Reap from It,”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39, No. 3 (2009), pp. 483~515; Emizet F. Kisangani, and Jeffrey Pickering, “Democratic Accountability and Diversionary Force: Regime Types and the Use of Benevolent and Hostile Military Forc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55, No. 6 (2011), pp. 1021~1046.

정책 결정 시 제도상의 제약과 정치적 반대에 직면할 수 있다는 비판도 존재하지만,[30] 많은 이들은 선거와 여론이 민주주의 지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면서 국민의 관심을 외부로 돌리면서 애국주의에 호소할 수 있는 관심전환전술이 민주주의 지도자에 의하여 흔히 사용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심전환분쟁 개시자와 더불어 관심전환분쟁의 타겟에 대한 관심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국내의 관심전환을 노릴 경우 지도자는 신중하게 무력분쟁의 상대를 선택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지도자가 선호할 분쟁국가의 형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타라(Ahmer Tarar)는 지도자가 국력차가 큰 국가를 상대로 분쟁을 일으키기보다 비슷한 국력의 국가를 상대로 분쟁을 일으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자 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31] 너무 강한 상대를 선택할 경우 승리할 가능성이 낮고 너무 약한 상대일 경우 승리의 원인으로 리더십보다는 국력차가 부각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성철은 국내 불안정에 시달리는 국가가 빠르게 국력이 상승하는 국가를 상대로 무력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제시하면서 국내 청중의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상대로 분쟁을 일으켜 지도자가 국내 호응과 지지를 꾀하는 전략을 취하고자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32]

이러한 조건/매개 변수에 대한 관심은 국내불안정과 다른 변수의 상호작용이 국제분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수반하였다. 국내불안정이 해당 국가의 무력분쟁 개시에 미치는 영향이 아니라 국

30- Ross A. Miller, "Domestic Structure and the Diversionary Use of Forc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39, No. 3 (1995), pp. 760~785.

31- Ahmer Tarar, "Diversionary Incentives and the Bargaining Approach to War,"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50, No. 1 (2006), pp. 169~188.

32- Sung Chul Jung, "Foreign Targets and Diversionary Conflict,"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24 JUN 2013, doi: 10.1111/isqu.12087).

내불안정과 특정 조건이 동시에 충족될 때와 그렇지 않은 때의 무력분쟁 발발을 비교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다음 장에서 논의하듯이 일반적으로 국내불안정 변수와 다른 변수의 곱으로 이뤄진 상호작용항(interaction term)을 통계모델에 도입하는 방법을 활용한다.

(2)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다변화

최근의 관심전환분쟁은 조건/매개변수를 통하여 국내불안정과 국제분쟁의 유의미한 관계를 발견하고자 하면서 동시에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다변화를 시도하였다. 즉, 관심전환행위와 국내불안정이라는 두 가지 변수를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하고자 한 것이다. 국내청중의 관심을 국내 문제에서 외부로 돌리기 위한 방법은 무력의 사용 이외에도 물리적 충돌 없는 위기 조성 혹은 내전 혹은 재난 지역에 경제/사회적 지원 혹은 치안유지활동 등이 있을 수 있다.[33] 무력을 사용하여 대규모 · 장기간 분쟁을 겪게 될 경우 닥칠 수 있는 후폭풍을 고려한다면 지도자는 확전의 가능성이 없는 위기 상황을 지속하거나 상대방의 적대 행위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일방적 지원을 선택하여 관심전환전략의 위험성을 최소화하면서도 국내결집을 통한 국면전환을 이루고자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의 경우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폭침과 같은 무력 행위를 일삼기도 하지만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을 통하여 끊임없이 위기 상황을 조성하는 전략도 이해할 수 있다. 북한 지도자 역시 무력 도발로 인한 분쟁의 확대는 비용과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기

33- Emizet F. Kisangani and Jeffrey Pickering, “Diverting with Benevolent Military Force: Reducing Risks and Rising above Strategic Behavior,”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51, No. 2 (2007), pp. 277~299.

때문에 적당한 수준의 긴장을 조성하여 국내 정치의 통제와 억압을 노린다고 예상할 수 있다.

한편, 연구자들은 국내 불안정을 나타내는 다양한 정치 · 경제 · 군사 변수들에 관심을 가졌다. 정치와 관련해서는 시위, 파업, 숙청, 선거, 여론 등에 대한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경제와 관련해서는 실업, 물가상승, 경제성장 등에 대한 지표를 이용하였고, 군사와 관련해서는 쿠데타 발생과 가능성을 강조하였다. 정치 변수의 경우 빈도 이외 위치와 규모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다. 즉,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시위의 규모, 주체, 발생지역에 따라 불안정 정도는 다를 수밖에 없지만 이에 대한 다국가 · 시계열 데이터를 구축하거나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제변수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전반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장점은 있으나 경제위기가 반드시 지도자의 정치력을 약화시키지는 않는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예를 들어, 1990년대 후반 국제외환위기로 한국 정부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김대중 정부에 대한 비판보다는 국제투기자본과 이전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었다. 군사 쿠데타의 경우는 라틴아메리카의 대부분 국가들처럼 군부의 정치 개입이 문제화 되어 있는 국가의 경우에 대해 국내 불안정을 대표하는 변수로 활용될 수 있지만[34] 민-군 관계가 안정화되어 있으며 다른 정치 · 경제적 이유로 지도자의 운명이 좌우되는 국가의 경우에는 적용하기 힘들다는 한계가 있다.

[34]- Ross A. Miller and Özlem Elgün, “Diversion and Political Survival in Latin America,”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55, No. 2 (2011), pp. 192~219.

3. 관심전환이론과 북한의 대남도발

관심전환이론을 통한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예측은 바람직한가? 만약 그렇다면 어떠한 구체적 접근을 시도해야 하는가? 탈냉전 이후 북한의 대외정책을 설명하는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북한의 내부 불안정을 주목한다. 경제실패와 외교고립 속에서 북한을 핵무기 개발을 선택하면서 대외적으로 협상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챙기고 대내적으로 위기결집효과를 노린다는 것이 일반적인 김정일 정권에 대한 평가였다. 김정일 사망 이후 출범한 김정은 정권의 경우에도 핵과 경제를 동시에 추구하는 병진노선을 채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발사와 3차 핵실험으로 대표되는 공세적 외교는 많은 이들로 하여금 국내결집과 권력공고화를 위한 통치술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국내불안정을 통하여 국제분쟁을 설명하는 관심전환이론에 기초하여 국내불안정에 처한 국가들이 무력분쟁 관련하여 보이는 패턴을 발견한다면 북한의 도발 행위를 설명하고 예측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현재 북한 지도부의 경우에는 외부와의 위기 조성 외에는 대내 결집을 도모할 만한 국내 정책이 부재한 상황이다. 많은 이들이 지적하듯이 시장화 혹은 민주화는 김정은 3대 세습체제의 이념적 · 물리적 기반을 악화시킬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외부와의 긴장을 간헐적으로 고조시키면서 대내 통제력을 유지하는 방법만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김정은 정권의 살아가는 법이다. 만약 남한과 주변국들이 북한과의 무력분쟁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북한의 일방적인 도발을 막을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미국이 북한 문제와 관련하여 피로감을 토로하고 한국에서는 지난 진보정권의 햇볕정책에 대한 국내 비판이 고조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의 도발이 주변국과의 협상과 보상으로 자제될 것을 기대하는 것도 힘들다.

하지만 북한이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동일한 수준의 적대적 정책 혹은 도발을 감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많은 이들이 예상하듯이 북한은 국내적으로 불안정에 시달릴수록 한국과 미국에 대한 공세 수준을 높이면서도 중국과의 특수 관계를 유지·강화하여 외교적 지지와 물리적 자원을 얻고자 할 것이다. 달리 말하면 A국가의 국내 불안정 수준만을 가지고서 A국가와 B국가의 관심전환분쟁을 예측하는 것은 힘들다. 보다 적실하고 엄밀한 예측은 A국가의 국내 불안정과 B국가의 유형에 대한 종합적 고려를 바탕으로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배경으로 다음 장에서는 본격적으로 관심전환분쟁 통계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통한 경험적 분석과 예측을 시도한다.

Ⅲ. 통계모형의 구축

KINU 정책연구시리즈 13-10

국내불안과 대외도발: 북한에 대한 적용 가능성 탐색

본 장에서는 앞에서 살펴 본 관심전환이론을 비롯한 국가간 무력분쟁 논의를 바탕으로 통계모형을 구축하고자 한다. 제1절에서는 관심전환분쟁모형과 주요 변수들의 측정방법에 대한 소개를 하고, 제2절에서는 관심전환분쟁모형을 통하여 1945년부터 2001년까지의 국가간 무력분쟁의 개시를 분석한다. 국내불안정을 비롯한 국가간 무력분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의 존재와 영향을 파악하는 작업을 토대로 다음 장에서는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을 예측하는 작업을 시도한다. 한 국가의 다른 국가의 무력분쟁 여부를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의 분석단위(unit of analysis)는 '방향성을 가진 국가쌍-연도(directed dyad-year)'이다. <표 Ⅲ-1>에서 나타난 것처럼 남한-북한과 같은 국가쌍은 매해 남한이 잠재적 분쟁개시자인 사례와 북한이 잠재적 분쟁개시자인 사례를 생성하게 된다. 남한과 북한처럼 서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쌍 뿐 아니라 남한과 아르헨티나와 같이 멀리 떨어져 있는 국가쌍도 전체 사례에 포함된다. 1945년부터 2001년에 이르는 기간의 방향성을 가진 국가쌍-연도의 총 수는 1,118,516이다.

표 Ⅲ-1 방향성을 가진 국가쌍-연도 사례

사례번호	잠재적 분쟁개시국	잠재적 분쟁타겟국	연도
…			
m	남한	북한	1990
m+1	북한	남한	1990
m+2	미국	북한	1990
m+3	북한	미국	1990
m+4	남한	미국	1990
m+5	미국	남한	1990
…			

사례번호	잠재적 분쟁개시국	잠재적 분쟁타겟국	연도
n	남한	북한	1991
n+1	북한	남한	1991
n+2	미국	북한	1991
n+3	북한	미국	1991
n+4	남한	미국	1991
n+5	미국	남한	1991
…			

1. 관심전환분쟁모형

관심전환분쟁모형은 국가간 무력분쟁 발발을 설명하기 위한 모델로 국내불안정을 비롯한 주요 변수들을 다음과 같이 포함하고 있다.[35] 잠재적 분쟁개시국(A)과 잠재적 분쟁타겟국(B)에 대한 무력분쟁의 개시를 설명하기 위한 모델로 A의 불안정과 B의 국력상승 정도와 분쟁영토 지배, A국가의 B국가에 대한 상대적 국력 정도, A와 B국가 사이의 동맹관계, 경제의존, 거리, 그리고 두 국가 모두 민주주의 국가 혹은 중소국가인지를 고려하고 있다.

35- 본 연구의 통계 모형은 정성철(2013)의 관심전환타겟모형에 기반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가설 검증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잠재적 타겟의 정체성과 패권국 관련 변수들은 제외하고 있다. 또한 타겟의 국력상승을 더미(dummy) 변수가 아닌 연속형(continuous) 변수로 측정하고 있다.

$$무력분쟁개시_{AB} = (불안정_A \times 국력상승_B) + (불안정_A \times 분쟁영토_B) + 불안정_A + 국력상승_B + 분쟁영토_B + 상대적국력_{AB} + 동맹 + 경제의존_{AB} + 경제의존_{BA} + 민주국가쌍 + 중소국가쌍 + 국경 + 거리$$

위의 통계모형은 두 개의 상호작용항(interaction term), ① 불안정$_A$ × 국력상승$_B$, ② 불안정$_A$ × 분쟁영토$_B$를 포함하고 있다. 이전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전적 관심전환이론은 국내 불안정이 국제 분쟁을 일으키는 주요 변수라고 보았으나 이에 대해서는 경험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최근의 연구들은 앞의 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국내 불안정과 상호작용하는 국내외 변수들에 주목하여 국내불안정을 겪는 국가가 어느 국가를 상대로 분쟁을 일으키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36] 본 연구는 특히 국내 불안정에 시달리는 국가는 국력이 빠르게 상승하는 국가 혹은 분쟁 중인 영토를 실효지배하고 있는 국가를 상대로 분쟁을 일으킬 확률이 높다는 연구결과에 주목한다. 국력이 빠르게 상승하는 국가는 국내 청중의 '두려움'을, 분쟁 영토를 지배 중인 국가는 국내 청중의 '욕심'을 자극시키기 때문에 국내불안정에 직면한 지도자는 이들을 상대로 무력분쟁을 일으킨다는 주장은 강한 경험적 증거로 지지된다.[37] 따라서 잠재적 분쟁개시국의 국내불안정과 잠재적 타겟국의 국력상승, 잠재적 분쟁개시국의

36- 예를 들어 Sara McLaughlin Mitchell and Brandon C. Prins, "Rivalry and Diversionary Use of Forc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48, No. 6 (2004), pp. 937~961; Sara McLaughlin Mitchell and Clayton L. Thyne, "Contentious Issues as Opportunities for Diversionary Behavior," *Conflict Management and Peace Science,* Vol. 27, No. 5 (2010), pp. 461~485.

37- 이러한 예상은 다음 연구의 경험적 발견을 근거로 한다. Sung Chul Jung, "Foreign Targets and Diversionary Conflict."

국내불안정과 잠재적 타겟국의 분쟁영토 점유 여부라는 두 개의 상호작용항을 중심으로 한 통계모형을 구축한다.

한편, 정치학을 비롯한 사회과학 연구에서 상호작용항을 이용한 통계분석은 점차 널리 활용되고 있다.[38] 상호작용항의 이용과 해석에 대한 비판적인 논의와 새로운 기법이 등장하면서 상호작용항을 이용한 통계분석은 다양하고 의미있는 가설 검증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상호작용항을 비롯한 위의 통계 모형에 등장하는 각 변수의 측정 방식은 아래와 같다.

가. 종속변수: A의 B에 대한 무력분쟁 개시 (무력분쟁개시$_{AB}$)

해당년도에 잠재적 분쟁개시국(A)이 잠재적 분쟁타겟국(B)에 대하여 무력분쟁을 일으켰는지를 더미(dummy) 형식으로 측정한다. 즉, 분쟁을 일으켰으면 1, 아니면 0을 부여한다. 이를 위하여 Correlates of War(COW) 프로젝트의 Militarized Interstate Disputes(MID) 데이터를 활용한다.[39] MID 데이터는 분쟁 여부 뿐 아니라 분쟁 강도(threat to use force, display use of force, use of force, war)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실제로 무력사용 이외에 무력위협이나 무력과시로 인한 국가간 갈등을 무력분쟁으로 간주하고 이러한 무

38- Robert J. Friedrich, "In Defense of Multiplicative Terms in Multiple Regression Equation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26, No. 4 (1982), pp. 797~833; Thomas Brambor, William Roberts Clark, and Matt Golder, "Understanding Interaction Models: Improving Empirical Analyses," *Political Analysis,* Vol. 14, No. 1 (2006), pp. 63~82; Bear F. Braumoeller, "Hypothesis Testing and Multiplicative Interaction Term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58, No. 4 (2004), pp. 807~820.

39- Stuart Bremer, Faten Ghosn, and Glenn Palmer, "The MID3 Data Set, 1993-2001: Procedures, Coding Rules, and Description," *Conflict Management and Peace Science,* Vol. 21, No. 2 (2004), pp. 133~154.

력분쟁 관련 행위를 양국 사이에서 최초로 실시하였을 경우 개시자로 간주하였다. 즉, 다른 국가의 무력분쟁 행위에 대한 반응으로 무력분쟁 행위를 취한 경우는 분쟁의 개시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이미 분쟁이 발생하여 진행 중인 경우 실시한 무력행위 역시 분쟁의 개시로 코딩되지 않았다. 그 결과 1945년부터 2001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총 1,538번의 무력분쟁 개시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다.

위의 MID 데이터에 따르면 남북한은 1993년부터 2001년 기간의 경우 총 4번의 무력분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다(<표 Ⅲ-2> 참조). 총 4번의 무력분쟁에서 처음으로 무력 관련 행위를 일으킨 국가는 모두 북한이었으며 분쟁 기간 중 남북한이 보인 적대 수준은 전쟁을 제외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들 분쟁 중에서 사망자를 수반한 경우는 1994년에 개시하여 남북한 무력을 사용한 분쟁이다. 따라서 1993년, 2000년, 2001년 북한이 남한에 대하여 무력분쟁을 일으킨 것으로 코딩을 하게 된다. 한편, 1994년의 경우 1993년에 일어나 분쟁이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북한이 남한에 대하여 무력분쟁을 일으킨 연도로 코딩되지는 않으면서 분석대상에서 제외된다. 남북한의 경우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 긴장 상황은 지속되어왔지만 무력분쟁은 상수이기보다 변수로서 남북관계의 갈등의 심화와 완화의 모습을 보여준다.

표 Ⅲ-2 MID 데이터에 따른 남북한 무력분쟁, 1993~2001

개시일	종결일	개시국	적대수준 (1~5)		사망자 수준 (0~5)	
			북한	남한	북한	남한
1993. 11. 5	1995. 4. 23	북한	3 (display use of force)	3 (display use of force)	0 (None)	0 (None)
1994. 10. 10	1999. 9. 3	북한	4 (use of force)	4 (use of force)	2 (26-100 deaths)	0 (None)
2000. 3. 23	2000. 3. 23	북한	2 (threat to use force)	1 (no militarized action)	0 (None)	0 (None)
2001. 6. 2	2001. 11. 27	북한	4 (use of force)	4 (use of force)	0 (None)	0 (None)

나.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

(1) A의 국내 불안정 (불안정$_A$)

잠재적 분쟁개시국(A)의 국내불안정을 측정하기 위하여 뱅스(Arthur S. Banks)가 럼멜의 연구[40]에 기초하여 개발한 Cross National Time-Series (CNTS)의 국내갈등이벤트데이터 중 '정부위기(governmental crisis)'와 '숙청(purges)'의 빈도를 활용하였다. CNTS 데이터는 정부위기를 '현 정권의 몰락을 위협하는 급변하는 상황(any rapidly developing situation that threatens to bring the downfall of the present regime)'으로 숙청을 '정권내 혹은 반대파 사람들을 투옥 혹은 처형하는

40- Rudolph J. Rummel, "Dimensions of Conflict Behavior within and between Nations," *General Systems Yearbook*, VIII (1963), pp. 1~50.

체계적 제거행위(any systematic elimination by jailing or execution of political opposition within the ranks of the regime or the opposition)'로 정의한 후 뉴욕타임즈(*New York Times*)를 비롯한 신문기사들을 바탕으로 양차세계대전 기간을 제외한 1816년부터 2012년에 이르는 기간의 200여 개의 국가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비록 '지역적 편향과 완결성의 결여(somewhat biased geographically and limited in comprehensiveness)' 등의 문제를 안고 있지만,[41] CNTS 데이터는 국내 정치불안정에 대한 가장 광범위하고 신뢰할만한 다국가·시계열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불안정 변수는 해당년도의 정부위기와 숙청의 빈도수에 1을 더한 후 로그값을 취한 값이다. 로그값을 취한 이유는 빈도수의 증가에 따라 불안정이 정비례하기 보다는 점차 제한적으로 불안정이 증가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빈도수가 0에서 1로 늘어났을 때 불안정의 증가가 빈도수가 3에서 4로 늘어났을 때 불안정의 증가보다 크다고 본다.

(2) B의 국력상승 (국력상승$_B$)

잠재적 분쟁타겟국(B)에 잠재적 분쟁개시국(A)에 대한 상대적 국력의 상승 정도는 COW 프로젝트의 National Material Capabilities 데이터의 Composite Index of National Capability (CINC)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42] CINC는 6가지 지표 - 철강생산, 군비, 군사수, 에너지소비, 총인구, 도시인구 - 에 기초하여 해당년도의 국가의 국력을 나타내

41- Databanks International, "User's Manual: Cross-National Time-Series Data Archive," p. 12.

42- J. David Singer, Stuart Bremer, and John Stuckey, "Capability, Distribution, Uncertainty, and Major Power War, 1820-1965," in Bruce M. Russett (ed.), *Peace, War, and Numbers* (Beverly Hills: Sage, 1972), pp. 19~48.

는 국력지수이다. B의 A에 대한 상대적 국력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t-1)년도의 상대적 국력에서 (t-5)년도의 상대적 국력을 제하였다. 따라서 국력상승B 변수가 양의 값이면 A보다 B의 상대적 국력이 상승했음을, 음의 값이면 B보다 A의 국력이 상승했음을 의미하며, 국력상승B 변수의 값이 크면 클수록 A의 상대적 국력은 상승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text{국력상승}_B = \left(\frac{CINC_B}{CINC_A + CINC_B}\right)_{(t-1)year} - \left(\frac{CINC_B}{CINC_A + CINC_B}\right)_{(t-5)year}$$

(3) B의 분쟁영토 점유 (분쟁영토B)

잠재적 분쟁타겟국(B)이 잠재적 분쟁개시국(A)과 분쟁 중인 영토를 실효지배하고 있는 영토타겟인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후스(Paul Huth)와 동료들이 개발한 영토분쟁 데이터를 활용하였다.[43] 후스는 영토와 관련하여 현상을 변경하려는 도전국과 현상을 유지하려는 방어국을 코딩한 국가간 영토분쟁 데이터를 만든 후 업데이트해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A와 B 사이에 영토분쟁 중이며 A가 도전국, B가 방어국인 경우 B가 A의 영토타겟으로 간주하였다.

43- Paul K. Huth and Todd L. Allee, *The Democratic Peace and Territorial Conflict in the Twentieth Centur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Paul K. Huth, Sarah E. Croco, and Benjamin J. Appel, "Does International Law Promote the Peaceful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isputes? Evidence from the Study of Territorial Conflicts since 1945,"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105, No. 2 (2011), pp. 415~436.

(4) A의 B에 대한 상대적 국력 (상대적국력AB)

잠재적 분쟁개시국(A)의 잠재적 분쟁타겟국(B)에 대한 상대적 국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COW의 National Material Capabilities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아래와 같이 A의 CINC 점수를 A와 B의 CINC 점수를 나눈 값을 상대적 국력으로 나타낸다. 따라서 상대적 국력 변수의 값이 클수록 A의 B에 대한 상대적 국력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text{상대적 국력}_{AB} = \left(\frac{CINC_A}{CINC_A + CINC_B} \right)_{(t-1)year}$$

(5) A와 B의 동맹 여부 (동맹)

잠재적 분쟁개시국(A)과 잠재적 분쟁타겟국(B)이 동맹국 관계인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COW의 Alliance v3.0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양국 사이의 '방어(defense),' '중립(neutrality),' 혹은 '우호(entente)' 조약이 존재한 경우 동맹 변수는 1로, 그렇지 않은 경우 0으로 코딩하였다.[44]

(6) A와 B의 경제의존 (경제의존AB, 경제의존BA)

잠재적 분쟁개시국(A)과 잠재적 분쟁타겟국(B)의 경제의존을 측정하기 위하여 헤그레와 동료들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45] 헤그레, 오닐,

---

44- Douglas M. Gibler and Meredith Sarkees, "Measuring Alliances: The Correlates of War Formal Interstate Alliance Dataset, 1816-2000,"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41, No. 2 (2004), pp. 211~222.

45- Havard Hegre, John R Oneal, and Bruce Russett, "Trade Does Promote Pace: New Simultaneous Estimates of the Reciprocal Effects of Trade and Conflict,"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47, No. 6 (2010), pp. 763~774.

러셋은 X국가의 Y국가의 경제의존도를 X와 Y의 무역량(수입량+수출량)을 X의 GDP로 나눈 값으로 측정하였다. 따라서 본 A의 B에 대한 의존도와 B의 A에 대한 의존도는 다음과 같이 측정되었다.

$$\text{경제의존}_{AB} = \left(\frac{A\text{와 }B\text{의 무역량}}{A\text{의 총 }GDP}\right)_{(t-1)year}$$

$$\text{경제의존}_{BA} = \left(\frac{A\text{와 }B\text{의 무역량}}{B\text{의 총 }GDP}\right)_{(t-1)year}$$

(7) A와 B의 민주주의 여부 (민주국가쌍)

잠재적 분쟁개시국(A)과 잠재적 분쟁타겟국(B)이 모두 민주주의 국가인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Polity IV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Polity 데이터는 해당 국가의 해당년도의 민주화 정도를 다양한 지표를 기본으로 하여 -10에서 +10 사이의 점수(Polity Score)를 산출하여 부여한다.[46] 일반적으로 +7 혹은 +6 이상의 점수를 받은 국가를 민주주의 국가로 인정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A와 B가 모두 7점 이상의 Polity 점수를 부여 받은 경우 민주국가쌍 변수를 1로, 그렇지 않는 경우 0으로 코딩하였다.

(8) A와 B의 중소국가 여부 (중소국가쌍)

잠재적 분쟁개시국(A)과 잠재적 분쟁타겟국(B)이 모두 중소국가(minor power)인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COW Major Power List를 활

46- Monty G. Marshall and Keith Jaggers, *Polity IV Project: Political Regime Characteristics and Transitions, 1800-2002*, Version p4v2002e (College Park: Center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Conflict Management, 2002).

용하였다.[47] COW에 따르면 제2차 대전 이후 강대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1991년 이후), 소련/러시아, 중국(1950년 이후), 일본(1991년 이후)을 의미한다. A와 B 모두 강대국인 아닌 경우 중소국가쌍 변수를 1로, 다른 경우는 0으로 코딩하였다.

(9) A와 B의 국경 존재 (국경), A와 B의 물리적 거리 (거리)

잠재적 분쟁개시국(A)과 잠재적 분쟁타겟국(B)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지, 양국 간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Eugene Program[48]이 제공하는 COW의 국가 관련 데이터[49]를 이용하였다. A와 B가 국경을 맞대고 있을 경우 국경 변수를 1로, 다른 경우는 0으로 코딩하였으며, 거리 변수를 위해서는 양국의 수도의 거리(miles)에 대한 로그값을 계산하였다.

다. 종합

<표 Ⅲ-3>은 위에서 기술한 변수들의 측정방식과 종속변수와의 관계를 요약하고 있다. 우선 종속변수, 즉 잠재적 분쟁개시국(A)의 잠재적 분쟁타겟국(B)에 대한 분쟁개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변수들은 ① A의 불안정과 B의 국력상승 상호작용, ② A의 불안정과 B의 분쟁영토 상호작용, ③ A의 B에 대한 상대적 국력, ④ 국경이다. 두 상호작용항은 최근의

47- Correlates of War Project, "State System Membership List," v2008.1 (2008), <http://correlatesofwar.org>.

48- D. Scott Bennett and Allan C. Stam, "EUGene: A Conceptual Manual," *International Interactions,* Vol. 26 (2000), pp. 179~204, <http://eugenesoftware.org>.

49- Correlates of War Project, "Direct Contiguity Data: 1816-2006," Version 3.1 (2006), <http://correlatesofwar.org>.

관심전환연구를 참고할 때 잠재적 분쟁개시국의 국내 불안정과 잠재적 분쟁타겟국의 국력과 라이벌이 상호작용을 통해 국제분쟁의 발발에 일정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 A의 상대적 국력 변수는 A의 힘의 투사와 B에 대한 상대적 우위를 고려할 때 분쟁개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A와 B가 국경을 맞대고 있을 경우 힘의 투사가 손쉬울 뿐 아니라 영토를 비롯한 다양한 이슈에서 갈등을 빚고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분쟁 개시 확률은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

반면, A의 B에 대한 분쟁개시를 억제할 변수들은 ① A와 B의 동맹 여부, ② A의 B에 대한 경제의존, ③ B의 A에 대한 경제의존, ④ 민주국가쌍, ⑤ 중소국가쌍, ⑥ A와 B의 거리를 생각할 수 있다. 세력균형 이론이 주장하듯 동맹은 공동의 위협에 대한 균형 행위이기 때문에 동맹 파트너에 대하여 무력 분쟁을 일으킬 확률은 낮을 것이다. 상호의존론이 주장하듯 양국이 서로 경제적 이익을 안겨주는 파트너일 경우 가급적 무력분쟁을 자제할 것이다. 특히 잠재적 분쟁개시국이 잠재적 분쟁타겟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경우 지도자가 국내적 반발을 의식하여 다른 타겟을 찾을 확률이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 민주평화론의 주장에 따르면 양국이 민주주의 제도를 취하고 있을 경우 규범과 제도, 전략적 사고의 영향으로 서로에 대한 무력사용을 자제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양국이 강대국이 아닐 경우 무력의 해외 사용에 있어서 물리적 한계 뿐 아니라 규범과 여론의 제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소국가쌍은 다른 국가쌍보다 분쟁에 휘말린 가능성이 낮다고 예상한다. 끝으로, 양국이 거리가 멀면 멀수록 힘의 투사가 어렵고 갈등의 소지가 적기 때문에 분쟁 가능성도 자연스럽게 낮아질 것이다.

표 Ⅲ-3 변수의 측정과 예상 영향

	변수명	측정방법	분쟁 개시에 미치는 영향
종속 변수	무력 분쟁개시AB	· MID dataset · 최초의 무력분쟁 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한 더미 변수 · 무력분쟁 행위: ① 무력 위협, ② 무력 과시, ③ 무력 사용, ④ 전쟁	
독립 변수	불안정A	· CNTS dataset · "정부위기"(governmental crisis)와 "숙청"(purge)의 빈도수의 로그값	국력상승B / 분쟁영토B와 상호작용으로 긍정적(+)
	국력상승B	· CINC Score · $\left(\frac{CINC_B}{CINC_A+CINC_B}\right)_{(t-1)year}-\left(\frac{CINC_B}{CINC_A+CINC_B}\right)_{(t-5)year}$	불안정A와 상호작용으로 긍정적(+)
	분쟁영토B	· Huth's Territory Dispute dataset · 분쟁영토를 실효지배하고 있는지에 대한 더미변수	불안정A와 상호작용으로 긍정적(+)
통제 변수	상대적 국력AB	· CINC Score · $\left(\frac{CINC_A}{CINC_A+CINC_B}\right)_{(t-1)year}$	긍정적(+)
	동맹	· COW dataset · 양국이 동맹을 맺고 있는지에 대한 더미변수	부정적(–)
	경제의존AB	· Hegre et al's dataset · $\left(\frac{A와\ B의\ 무역량}{A의\ 총\ GDP}\right)_{(t-1)year}$	부정적(–)
	경제의존BA	· Hegre et al's dataset · $\left(\frac{A와\ B의\ 무역량}{B의\ 총\ GDP}\right)_{(t-1)year}$	부정적(–)
	민주국가쌍	· Polity IV · 양국이 모두 민주국가인지에 대한 더미 변수	부정적(–)

	변수명	측정방법	분쟁 개시에 미치는 영향
통제 변수	중소국가쌍	· COW's Major Power List · 양국이 모두 중소국가인지에 대한 더미 변수	부정적(-)
	국경	· COW dataset · 국경을 맞대고 있는지에 대한 더미 변수	긍정적(+)
	거리	· COW dataset · 양국 수도 간 거리의 로그값	부정적(-)

끝으로, <표 Ⅲ-4>는 각 변수들의 기본 통계값을 보여준다. 1920년부터 2001년까지의 방향성을 가진 국가쌍-연도의 사례들을 수집하였으며 모든 사례에 대하여 각 변수들 관련 정보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례수는 변수에 따라 다르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로 더미변수로 코딩된 무력분쟁개시AB는 전체 사례의 약 1.5%에서 1로 나타났으며, 사망자를 발생시킨 무력분쟁의 개시 여부를 측정한 무력분쟁개시AB_FATAL변수의 경우 전체 사례의 약 1.1%에서 1로 코딩되었다. 잠재적 분쟁개시자와 잠재적 분쟁타겟국가 민주주의 국가인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더미로 측정한 민주국가쌍 변수와 달리 민주국가쌍SCORE 변수는 양국의 Polity Score를 더한 값으로 최소값은 -20, 최대값은 +20을 기록하였다. 이외의 변수들은 앞서 언급한 방식에 따라 더미 혹은 연속형 변수로 측정되었다.

표 Ⅲ-4 기술통계

변수명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연도	1,118,516	1,982	14.11	1,945	2,001
무력분쟁개시$_{AB}$	1,111,932	0.0014	0.0372	0	1
무력분쟁개시$_{AB_FATAL}$	1,111,932	0.0010	0.0313	0	1
불안정$_{A}$×국력상승$_{B}$	915,879	0.0001	0.02	-1.03	1.32
불안정$_{A}$×분쟁영토$_{B}$	915,702	0.0013	0.04	0	2.64
불안정$_{A}$	1,030,985	0.17	0.38	0	3.58
국력상승$_{B}$	940,982	0.00	0.04	-0.94	0.94
분쟁영토$_{B}$	940,170	0.004	0.065	0	1
상대적국력$_{AB}$	1,080,290	0.50	0.37	0	1.00
동맹	1,080,292	0.07	0.26	0	1
경제의존$_{AB}$	1,031,356	0.0021	0.02	0.00	4.14
경제의존$_{BA}$	1,031,356	0.0021	0.02	0.00	4.14

변수명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민주국가쌍	847,290	0.10	0.30	0	1
민주국가쌍SCORE	848,698	-0.57	10.90	-20	20
중소국가쌍	1,080,292	0.93	0.26	0	1
국경	1,115,896	0.02	0.14	0	1
거리	1,115,896	8.25	0.78	1.79	9.42

2. 분석 및 논의

가. 로짓분석

본 연구는 우선 1945년부터 2001년에 이르는 기간의 무력분쟁개시에 대한 로짓(logit) 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가 분쟁 개시 여부를 0과 1로 코딩한 더미 변수이기 때문에 로짓 분석을 통하여 국내 불안정을 비롯한 변수들이 국가간 무력분쟁 발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50] 아래에서 상술하겠지만 전반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잠

50- 한편, 동일한 국가쌍 사례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비독립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벡 (Nathaniel Beck)과 그의 동료들의 조언을 따라서 국가쌍 내 평화 연도(peace years) 변수와 이에 대한 스플라인(spline) 변수들을 통계모델에 포함하였다. 로짓 분석 결과를 나타내는 표에서는 이들 변수들의 결과는 생략하였다. Nathaniel Beck, Jonathan N. Katz, and Richard Tucker, "Taking Time Seriously: Time-Series-Cross-Section Analysis with a Binary Dependent Variabl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42, No. 4 (1998), pp. 1260~1288.

재적 분쟁개시국의 국내불안정은 잠재적 분쟁타겟국이 국력이 상승하거나 분쟁영토를 점유하고 있을 때 분쟁개시를 촉발하는 영향이 있으며, 잠재적 분쟁개시국의 상대적 국력이 클수록 분쟁을 일으킬 확률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양국이 민주주의 혹은 중소국가인 경우 분쟁개시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국 사이의 경제의존 정도는 분쟁개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확장된 기간(1920년 ~ 2011년)과 상이한 모집단(정치적으로 관련된 국가쌍)을 사용하거나 사망자를 발생시킨 고강도분쟁의 개시를 종속변수로 삼은 경우에서도 유지되었다.

우선, 1945년부터 2001년에 이르는 기간의 분쟁개시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자. <표 Ⅲ-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잠재적 개시국의 국내 불안정과 잠재적 타겟국의 국력상승/분쟁영토 사이의 상호작용항(불안정$_A$ × 국력상승$_B$, 불안정$_A$ × 분쟁영토$_B$)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잠재적 분쟁타겟국의 국력상승(국력상승$_B$)은 부정적 영향을, 잠재적 분쟁타겟국의 분쟁영토(분쟁영토$_B$)는 긍정적 영향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미친다는 것이다(99% 신뢰수준). 이는 잠재적 개시국이 안정 상태일 때(불안정$_A$=0) 잠재적 타겟국의 국력이 상승할수록 분쟁개시 가능성은 낮아지지만, 잠재적 개시국이 국내 불안정을 겪고 있을 때(불안정$_A$>0) 잠재적 타겟국의 국력 상승은 분쟁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51] 즉, 지도자가 안정기에는 국력이 상승하는 상대로 분쟁을 일으키는 것을 회피하지만, 불안정기에는 그러한 국가를 상대로 오히려 분쟁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다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잠재적 타겟구의 분

51- 이는 불안정과 국력상승의 상호작용 변수 계수(4.999)의 절대값이 국력상승의 계수(-2.809)의 절대값보다 크며, 불안정 변수 계수(0.086)가 양수이기에 가능하다.

쟁영토 점유는 잠재적 개시국의 국내 불안정과 상관없이 분쟁개시 확률을 증가시키는 영향을 가진다. 물론 이러한 사실은 지도자가 국내 불안 속에서 기존의 영토분쟁상대로 관심전환분쟁을 일으키는 경향을 보인다는 기존의 발견을 반박하는 것은 아니다.

표 III-5 로짓분석 I, 1945~2001

	모델1	
	b	se
불안정$_A$×국력상승$_B$	4.999***	1.129
불안정$_A$×분쟁영토$_B$	0.496**	0.217
불안정$_A$	0.086	0.091
국력상승$_B$	-2.809***	0.863
분쟁영토$_B$	0.583***	0.173
상대적국력$_{AB}$	0.404**	0.161
동맹	0.033	0.12
경제의존$_{AB}$	0.833	1.566
경제의존$_{BA}$	-3.081	3.121
민주국가쌍	-0.592***	0.203
중소국가쌍	-1.748***	0.129
국경	1.841***	0.201
거리	-0.564***	0.083
Constant	2.015***	0.718
N	715,546	
Log-Likelihood	-5205.223	
BIC	10653.1	

참고: * .10, ** .05, *** .01; Robust standard errors clustered by dyadid.

한편, 잠재적 개시국의 잠재적 타겟국에 대한 상대적 국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95% 신뢰수준). 즉, 상대적 국력의 변화와 별개로 상대적 국력이 클수록 분쟁을 일으킬 확률이 높다는 사실은 파워의 분배 자체가 분쟁개시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예상한 바와 같이 민주국가쌍, 중소국가쌍, 그리고 거리 변수는 분쟁개시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국경을 맞대고 있을 경우 분쟁개시 가능성은 증가한다. 끝으로, 양국간 경제의존과 동맹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의존은 국가로 하여금 상대적 이익과 취약성에 대한 우려를 낳게 하며 분쟁소재를 제공한다는 현실주의 주장[52]을 뒷받침하지만, 동시에 안보위협을 공유할 경우 국가간 협력이 발생한다는 현실주의의 주장[53]은 약화시키고 있다. 이들 변수의 국제분쟁에 미치는 영향은 보다 면밀한 연구를 필요로 한다.

위에서 살펴 본 기본 모델(모델1)의 설명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상호작용항과 잠재적 타겟국과 관련된 변수를 제외한 모델에 대한 로짓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Ⅲ-6>의 모델2는 잠재적 분쟁타겟국의 국력상승과 분쟁영토 변수를 제외하고 잠재적 분쟁타겟국의 불안정과 기타 변수들을 통하여 무력분쟁의 발발을 설명하고자 했다. 달리 말해, 국내 불안정과 다른 변수와의 상호작용을 염두하지 않은 전통적 관심전환이론을

52- 현실주의자들의 경제 상호의존의 안보효과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Kenneth N. Waltz, "The Myth of National Interdependence," in Charles P. Kindleberger (ed.), *The International Corporation* (Cambridge: MIT Press, 1970), pp. 205~223; Joseph M. Grieco, "Anarchy and the Limits of Cooperation: A Realist Critique of the Newest Liberal Institutionalism,"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2, No. 3 (1988), pp. 485~507.

53- 동맹 형성에 대한 현실주의자의 대표적인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 Stephen M. Walt. *The Origins of Allianc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7).

반영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모델에서 국내 불안정 변수는 분쟁 개시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이지만 모델1과 비교하여 그 정도가 제한적이다(95% 신뢰수준). 모델1과 모델2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두 모델의 Log-Likelihood 값, Log-Likelihood Ratio 테스트,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BIC) 점수를 비교할 때 모델1이 모델2에 비하여 보다 뛰어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54]

한편, 모델1이 고강도 무력분쟁에 대한 설명력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종속변수를 무력사용 위협과 무력 시위를 포함한 무력분쟁의 개시(무력분쟁개시$_{AB}$)에서 사망자를 발생시킨 무력분쟁의 개시(무력분쟁개시$_{AB_FATAL}$)로 바꾼 후 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Ⅲ-5>의 모델1과 <표 Ⅲ-6>의 모델3을 비교하였을 때 대부분의 설명변수들을 유사한 방향성과 영향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단, 잠재적 분쟁타겟국의 국력상승이 부정적 영향이 증가하고, 불안정과 국력상승 상호작용항의 긍정적 영향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국력이 상승하고 있는 잠재적 타겟을 상대로 고강도 무력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저강도 무력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에 비하여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모델의 BIC 점수를 비교할 때 오히려 고강도 무력분쟁의 개시를 설명하는 모델3이 모델1에 비하여 설명력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가 제시하는 국내 불안정을 비롯한 국내외 변수를 통한 국가간 분쟁 개시 모델은 저강도 무력 분쟁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54- Log-Likelihood Ratio 테스트의 결과는 chi2(4) = 72.00, p=0.0000이다. Log-Likelihood 값이 0에 가까울수록 모델의 설명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BIC 점수가 작을수록 종속변수를 설명하기 위한 독립/통제변수의 수 대비 설명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Ⅲ-6 로짓분석 Ⅱ, 1945~2001

	모델2: 전통적 관심전환이론		모델3: 고강도 분쟁 (DV: 무력분쟁개시$_{AB_FATAL}$)	
	b	se	b	se
불안정$_A$×국력상승$_B$			3.916**	1.667
불안정$_A$×분쟁영토$_B$			0.485*	0.248
불안정$_A$	0.186**	0.089	0.098	0.11
국력상승$_B$			-3.090***	0.98
분쟁영토$_B$			0.577***	0.186
상대적국력$_{AB}$	0.356**	0.171	0.299*	0.181
동맹	0.154	0.13	-0.006	0.14
경제의존$_{AB}$	0.713	1.697	1.883*	1.092
경제의존$_{BA}$	-2.621	2.933	-6.176**	2.655
민주국가쌍	-0.827***	0.225	-0.401**	0.19
중소국가쌍	-1.935***	0.148	-1.457***	0.155
국경	2.407***	0.202	1.749***	0.237
거리	-0.599***	0.085	-0.528***	0.091
Constant	1.418*	0.77	1.458*	0.793
N	782,770		715,546	
Log-Likelihood	-5815.963		-3946.848	
BIC	11821.914		8136.35	
참고: * .10, ** .05, *** .01; Robust standard errors clustered by dyadid.				

다음으로는 본 연구의 기본 모델(모델1)을 제한된 국가쌍 혹은 확장된 기간에 적용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먼저 모든 국가쌍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관련된 국가쌍(politically relevant dyad)'을 대상으로 로짓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Ⅲ-7>의 모델4 참조). 모든 국가를 대상으

로 분쟁개시 여부를 분석할 경우 지리적 이유 혹은 군사전략적 이유로 전혀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은 국가쌍을 포함시켜 관심대상 국가쌍에 대한 설명과 예측을 가로막거나 제한한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 두 개의 국가가 국경을 맞대거나 400마일 이하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는 경우와 양국 중 한 나라가 강대국(major power)인 경우 두 국가를 '정치적으로 관련된 국가쌍'으로 정의하고 이들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다. <표 Ⅲ-5>의 모델1과 <표 Ⅲ-7>의 모델4를 비교할 때 전체 국가쌍에서 정치적으로 관련된 국가쌍으로 사례를 제한하였을 경우 (N=715,546 → N=74,863) 독립변수와 통제변수의 영향의 방향과 정도에 큰 변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비록 두 상호작용항의 통계적 유의미성 정도가 99% 수준에서 90% 수준으로 떨어지는 점은 발견되지만 모델적합성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Log-Likelihood: -5205.223 → -3735.306; BIC: 10653.1 → 7672.633).

또한 분석기간을 1920년부터 2001년으로 확대하여 로짓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Ⅲ-7>의 모델5 참조). 이전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력균형이론에서는 다극체제와 양극체제의 차이점을 강조하며 양극체제의 안정성을 주장한다. 따라서 냉전체제 이전 시기를 포함한 경우 모델1의 분석결과에 변화가 생기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표 Ⅲ-5>의 모델1과 <표 Ⅲ-7>의 모델5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듯이 잠재적 개시자의 불안정과 잠재적 타겟국의 국력상승/분쟁영토의 상호작용항을 비롯한 설명변수들의 영향력 방향과 정도에 주목할 만한 변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사례 수의 증가와 더불어 (N: 715,546 → 756,336) 모델적합도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Log-Likelihood: -5,205.223 → -5,615.613, BIC: 10,653.1 → 11,474.877).

표 Ⅲ-7 로짓분석 Ⅲ

	모델4: 정치적으로 관련된 국가쌍(Politically Relevant Dyads)		모델5: 1920-2001		모델6: 민주주의 점수 (w. 민주국가쌍SCORE)	
	b	se	b	se	b	se
불안정A× 국력상승B	3.592*	2.098	4.630***	1.374	5.125***	1.111
불안정A× 분쟁영토B	0.380*	0.196	0.467**	0.196	0.494**	0.214
불안정A	0.136	0.088	0.07	0.086	0.096	0.091
국력상승B	-1.988*	1.05	-3.122***	0.832	-2.901***	0.871
분쟁영토B	0.599***	0.144	0.536***	0.161	0.600***	0.172
상대적국력AB	0.322**	0.143	0.368**	0.154	0.402**	0.162
동맹	-0.115	0.095	0.08	0.113	0.002	0.12
경제의존AB	1.293	0.827	0.405	1.631	-0.289	1.866
경제의존BA	-1.51	2.831	-2.344	2.661	-4.374	3.294
민주국가쌍	-0.440***	0.163	-0.712***	0.203		
민주국가쌍 SCORE					-0.002	0.004
중소국가쌍	0.09	0.155	-1.755***	0.121	-1.736***	0.132
국경	0.764***	0.14	1.785***	0.188	1.851***	0.203
거리	-0.184***	0.05	-0.559***	0.075	-0.559***	0.082
Constant	-0.967**	0.441	2.029***	0.657	1.945***	0.711
N	74,863		756,336		715,546	
Log-Likelihood	-3735.306		-5615.613		-5215.82	
BIC	7672.633		11474.877		10674.294	

참고: * .10, ** .05, *** .01; Robust standard errors clustered by dyadid.

끝으로, 민주국가쌍 변수의 측정방법을 변경하여 양국의 민주주의 정도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민주국가쌍 변수는 Polity 점수를 이용하여 양국이 모두 7점 이상을 기록할 때 1, 아닌 경우는 0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측정하였지만, 민주국가쌍SCORE 변수는 양국의 Polity 점수를 합산한 값을 부여하였다. 매해 각 국가에 부여되는 Polity 점수의 최소값이 -10, 최대값이 +10이기에 민주국가쌍SCORE 변수의 최소값은 -20, 최대값은 +20으로 양국의 민주주의 정도를 나타낸다. 이렇듯 민주국가쌍 변수의 측정 방법을 달리해 본 이유는 다음 장에서 본격적으로 북한의 대남 도발을 예측하기에 앞서 제한적 민주화가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표 Ⅲ-7>의 모델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민주국가쌍SCORE 변수는 민주국가쌍 변수와 달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Ⅳ. 북한의 대남도발 예측

KINU 정책연구시리즈 13-10

국내불안과 대외도발: 북한에 대한 적용 가능성 탐색

이번 장에서는 앞에서 개발한 통계모형을 통하여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 가능성을 예측하고자 한다. 제Ⅰ장에서 언급한 북한과 같이 내부정보의 존재와 공개가 제한적인 대상의 행동을 예측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일반이론에 기반하여 다수국가의 시계열자료를 활용한 통계모형을 구축하였다. 따라서 이를 통해 북한의 향후 무력도발 행동에 대한 엄밀한 예측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추측과 루머가 아닌 이론과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추론은 가능하다. 위의 통계모델에서 사용한 설명 변수들 중 거리와 국경, 민주주의와 중소국가쌍, 분쟁영토와 동맹여부는 남북한 관계에서 상수에 가깝거나 빠른 시일 내에 바뀔 가능성이 매우 낮다.[55] 또한 경제의존과 상대적국력은 최근의 상황을 반영하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예측값으로 활용하였다.[56] 따라서 본 장에서는 현재 다양한 전망을 낳고 있는 북한의 국내 불안정(불안정$_A$)과 남북한의 세력균형변화(국력상승$_B$)의 다양한 조합을 상정한 후 각 상황에서 북한이 한국에 대하여 무력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예측한다. 여기에서 무력도발은 실제적인 무력 사용 뿐 아니라 무력위협과 무력과시와 같은 저강도 도발 행위를 포함한다.

55- 이번 장에서 북한의 대남 도발과 관련하여 한계영향과 예측확률을 계산하기 위하여 동맹과 민주주의 국가쌍 변수에는 각각 0을, 분쟁영토, 중소국가쌍과 국경 변수에는 각각 1을 부여하였다. 거리 변수는 서울과 평양 거리의 로그값을 취한 4.8040을 부여하였다.

56- 이번 장에서 북한의 대남 도발과 관련하여 한계영향과 예측확률을 계산하기 위하여 상대적 국력 변수는 남북한의 2007년도 CINC 점수를 이용하여 0.3519를 부여하였으며, 경제의존 변수는 2011년 남북한 무역량과 남북한 GDP 자료를 이용하여 (통계청과 IMF 자료 활용) 0.00138075(경제의존$_{AB}$)와 0.00015319(경제의존$_{BA}$)를 부여하였다. 끝으로, 평화 연도(peace years) 변수에는 1을 부여하였다. 이는 2013년에 북한의 대남 도발이 있었음을 가정하고 2014년 북한의 대남 도발 가능성을 예측하고자 한 것이다.

1. 세력균형과 영토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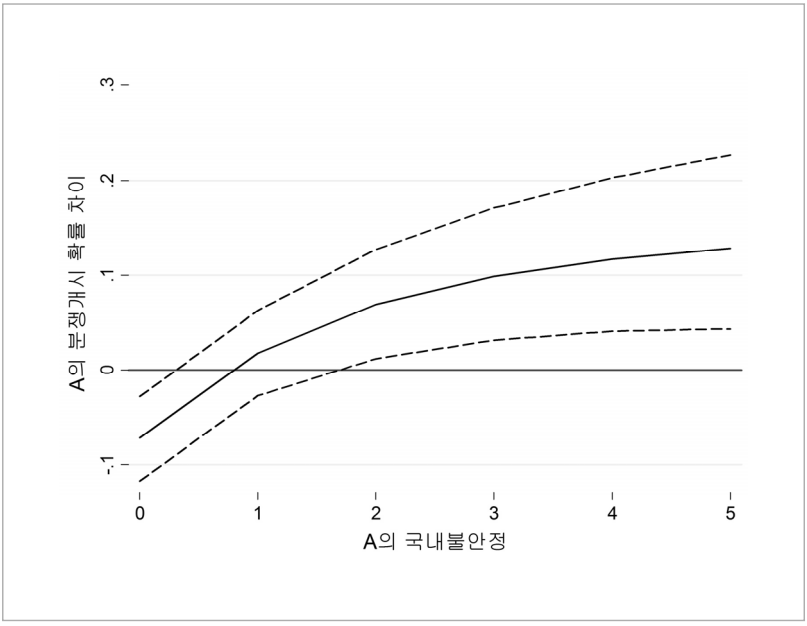
다양한 북한의 국내 불안정과 한반도 세력균형변화의 상황 속에서 북한의 대남 도발을 예측하기 이전에, 앞에서 살펴본 통계모형에서 잠재적 분쟁타겟국의 국력상승과 분쟁영토점유가 잠재적 개시국의 도발개시에 미치는 한계영향(marginal effect)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본 연구의 통계모델은 잠재적 개시자(A)의 국내불안정과 잠재적 타겟국(B)의 국력상승, A의 국내불안정과 B의 분쟁영토점유에 대한 두 개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호작용항의 영향을 정확히 해석하기 위해서 사회과학자들은 이들 변수의 계수와 표준오차 뿐 아니라 그래프를 통한 한계영향을 확인하고 있다.[57] 따라서 본 연구도 우선 A의 국내 불안정 변화에 따르는 B의 국력상승과 분쟁영토 변수의 한계영향을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잠재적 분쟁타겟국(B)의 국력변화가 잠재적 분쟁개시국(A)의 도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 <그림 Ⅳ-1>의 Y축은 A가 B에 대하여 도발을 감행할 확률을 B의 국력상승이 높은 경우(국력상승$_B$=0.0347, 90%)와 낮은 경우(국력상승$_B$=-0.0347, 10%)를 상정하여 각각 계산한 후 전자에서 후자를 제한 값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Y값이 클수록 B의 국력상승이 크면 A의 B에 대한 도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Y값이 작을수록 B의 국력상승이 크면 A의 B에 대한 도발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X축은 A의 국내불안정 정도를 나타낸 것으로 '정부위기'와 '숙청'의 빈도를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X값이 클수록 A의

57- 상호작용항의 해석을 위한 한계영향의 활용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Thomas Brambor, William Roberts Clark, and Matt Golder, "Understanding Interaction Models: Improving Empirical Analyses," *Political Analysis*, Vol. 14, No.1 (2006), pp. 63~82; William Berry, Matt Golder, and Daniel Milton, "Improving Tests of Theories Positing Interaction," *Journal of Politics*, Vol. 74, No. 3 (2012), pp. 653~671.

불안정 정도가 증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의 실선은 각 X값에 대한 Y값, 즉 A의 국내 불안정에 상응하는 B의 도발 확률차를 나타내며 두 점선은 95% 신뢰수준이다.

그림 Ⅳ-1 한계영향: 잠재적 분쟁타겟국(B)의 국력상승 변화 (90% → 10%)



<그림 Ⅳ-1>의 실선은 왼쪽-아래에서 오른쪽-위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잠재적 분쟁타겟국의 상대적 국력이 상승하게 되면 잠재적 분쟁개시국의 국내불안정은 도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A의 국내불안정이 0일 경우 Y값은 음수이기 때문에 이는 B의 국력상승 변수가 클 때보다 작을 때 A의 도발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달리 말하면, 국내안정을 이룬 국가는 잠재적 타겟

이 국력이 빠르게 상승할수록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낮다. 반면, A의 국내불안정 값이 1이상인 경우 Y값은 양수이며, 국내 불안정 값이 2이상인 경우 Y값의 95% 신뢰수준의 값도 양수이다. 이는 B의 국력 상승 변수가 작을 때보다 클 때 A의 도발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국내불안정을 경험하는 국가는 잠재적 타겟이 국력이 빠르게 상승할수록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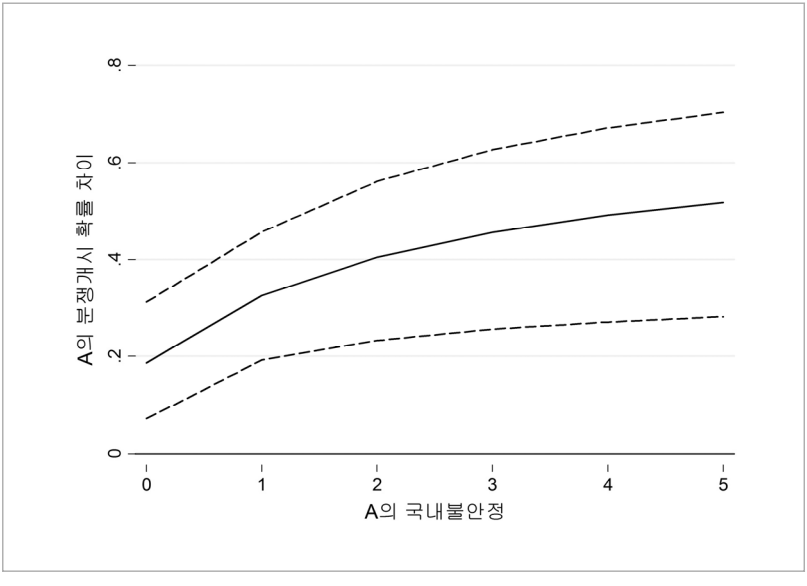
이를 남북한 관계에 적용하여 정리해보면 <표 Ⅳ-1>과 같다. 북한이 국내 불안정을 겪는 경우 남북한 힘의 격차가 심화될수록 북한의 대남 도발 가능성은 증가한다. 반대로, 북한이 국내 안정을 보이는 경우 남북한 힘의 격차는 북한의 대남 도발 가능성을 감소시킨다. 이러한 통계분석에 기반한 북한의 행동 예측은 논리적 설명이 가능하다. 북한 지도부가 국내적 정치적 도전에 직면하였을 경우 빠르게 국력이 상승하는 남한에 대한 국내 두려움을 배경으로 대남 도발을 통하여 국내 결집을 시도하고자 할 것이다. 반대로 북한 지도부가 안정적으로 북한 내부를 통제하고 있다면 남한에 대하여 유화적 태도를 견지하며 도발 대신 경협과 원조를 통한 이익 확보에 주력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표 Ⅳ-1>의 네 가지 경우에서 북한이 대남 도발을 선택할 확률에 대한 기대값은 아래에서 보다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표 Ⅳ-1 세력균형변화와 북한의 대남 도발 가능성

	남북한 힘의 격차 심화	남북한 힘의 격차 유지
북한 국내 불안정	북한의 대남 도발 가능성 높음	북한의 대남 도발 가능성 낮음
북한 국내 안정	북한의 대남 도발 가능성 낮음	북한의 대남 도발 가능성 높음

다음으로는 잠재적 분쟁타겟국(B)의 분쟁영토점유가 잠재적 분쟁개시국(A)의 도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 <그림 Ⅳ-2>의 Y축은 A가 B에 대하여 도발을 감행할 확률을 B가 분쟁영토를 점유하는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에 대하여 각각 구한 후 전자에서 후자를 제한 값을 나타낸다. 따라서 Y값이 클수록 B가 분쟁영토를 점유한 사실이 A의 도발 가능성을 보다 증가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X값은 A의 국내불안정 이벤트의 횟수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Ⅳ-2 한계영향: 잠재적 분쟁타겟국(B)의 분쟁영토점유 유무 (1 → 0)



<그림 Ⅳ-2>의 실선과 점선은 잠재적 개시국(A)의 국내불안정을 나타내는 X의 전구간에서 양의 값을 나타낸다. 이는 잠재적 타겟국(B)이 분쟁영토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A의 분쟁개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그림 Ⅳ-2>의 실선은 <그림 Ⅳ-1>에서와 마찬가지로 왼쪽-아래에서 오른쪽-위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를 통해 B가 분쟁영토를 점유하고 있을 경우 A의 국내 상황이 불안정할수록 A의 무력도발 가능성은 높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를 북한의 대남 도발에 적용할 경우 북한의 국내 불안정이 심화될수록 대남 도발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을 하게 된다. 남북한은 서로 한반도의 통일을 명시적으로 추구하고 있으며 한국전쟁과 서해교전과 같은 크고 작은 영토분쟁을 계속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영토분쟁 상황은 남북한 무력 분쟁이 발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은 명확하다. 위의 통계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의 국내 불안정이 심할수록 북한의 영토분쟁 상대, 즉 남한에 대한 도발 가능성은 보다 증가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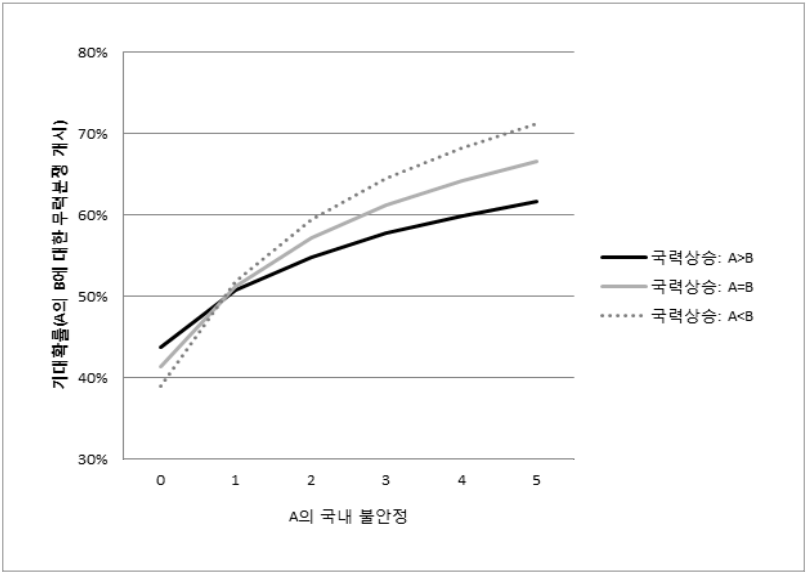
2. 무력도발 기대확률

위에서 세력균형변화와 분쟁영토점유가 국내불안정과 무력도발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번 절에서는 본격적으로 무력도발을 일으킬 확률을 살펴보기로 하자. <표 Ⅳ-2>는 잠재적 분쟁개시국(A)의 국내 불안정과 잠재적 분쟁타겟국(B)의 국력상승에 따른 A의 B에 대한 무력도발 가능성을 정리하고 있다.

표 Ⅳ-2 잠재적 개시국(A)의 잠재적 타겟국(B)에 대한 분쟁개시 기대확률

		A의 국내 불안정(불안정A)						
		0	1	2	3	4	5	변화 (%)
B의 상대적 국력상승 (국력상승B)	저 (10%)	0.4368	0.5072	0.5484	0.5773	0.5994	0.6171	41.27
	중 (50%)	0.4130	0.5129	0.5714	0.6118	0.6421	0.6661	61.28
	고 (90%)	0.3896	0.5186	0.5940	0.6451	0.6827	0.7118	82.69
	변화 (%)	-10.81	2.24	8.31	11.75	13.90	15.34	

그림 Ⅳ-3 무력도발의 기대확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남북한이 영토분쟁 상황에 있기 때문에 분쟁영토 변수에 1을 부여한 후 잠재적 분쟁개시국의 국내 불안정 변수와 잠재적 분쟁타겟국의 국력상승 변수에 변화를 주어 총 15가지 상황에서 무력도발이 일어날 확률을 정리하였다. <그림 Ⅳ-3>은 <표 Ⅳ-2>의 내용을 시각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먼저 잠재적 분쟁개시국의 국내 (불)안정의 영향을 살펴보자. 잠재적 개시국이 국내적으로 안정할 때 잠재적 타겟국의 상대적 국력상승의 심화는 분쟁개시확률을 약 11% 줄어들게 한다. 즉 국내안정국가는 상대적으로 국력이 상승하는 잠재적 타겟일수록 분쟁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잠재적 개시국이 국내적으로 불안정할 때 잠재적 타겟국의 상대적 국력상승의 심화는 분쟁개시확률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경향은 불안정 정도가 심화될수록 보다 뚜렷하게 드러나서 불안정 사건이 1번 일어났을 경우 약 2% 증가하지만, 5번 일어났을 경우 약 15% 증가한다. 즉, 국내불안정국가는 상대적으로 국력이 상승하는 잠재적 타겟일수록 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

다음으로 잠재적 분쟁타겟국의 국력상승의 영향을 논의해보자. 잠재적 분쟁타겟국의 국력이 잠재적 분쟁개시국에 비하여 감소하였을 경우 잠재적 분쟁개시국의 국내 불안정의 최대 증가는 분쟁개시확률을 약 41% 증가시킨다. 반면에 잠재적 분쟁타겟국의 국력이 상대 국력이 증가하였을 경우 잠재적 분쟁개시국의 국내 불안정 변수의 최소값에서 최대값으로의 변화는 분쟁개시확률을 약 83% 증가하게 한다. 만약 양국간 세력균형에 변화가 없는 경우, 잠재적 분쟁개시국의 국내 불안정 변수의 변화는 분쟁개시확률을 61% 증가시킨다. 요약하면 잠재적 개시국의 국내불안정 변화는 잠재적 타겟의 상대적 국력이 빠르게 상승할수록 분쟁개시에 보다 큰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끝으로 잠재적 개시국(A)의 국내불안정과 잠재적 타겟국(B)의 국

력상승의 영향력을 비교해 보자. 앞서 기술한 것처럼 A의 불안정한 변화는 분쟁개시확률을 최소 41%, 최대 82% 변하게 만들다. 하지만 B의 상대적 국력변화는 최소 2%, 최대 15%의 변화만을 가져온다. A의 국내 불안정 변수가 0에서 1로 증가한 경우만 살펴보더라도 최소 16%(0.4368 → 0.5072), 최대 33%(0.3896 → 0.5186)의 변화를 가져온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국내 불안정이 남북한 세력균형변화보다 북한의 대남도발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V. 결론

KINU 정책연구시리즈 13-10

국내불안과 대외도발: 북한에 대한 적용 가능성 탐색

1. 요약 및 한계

본 연구는 1945년부터 2001년까지 약 200여 국가들의 무력분쟁 관련 데이터에 대한 통계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발견하였다. 첫째, 국내정치 불안정을 겪고 있는 국가는 무력위협, 무력과시, 무력사용, 전쟁과 같은 무력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둘째, 국내정치 불안정국가는 특히 상대적 국력이 상승하는 국가 혹은 분쟁영토를 실효지배하고 있는 국가에 대하여 무력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더욱 높다. 셋째, 국내정치적으로 안정적인 국가는 상대적 국력이 상승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오히려 분쟁을 덜 일으킨다. 넷째, 모든 국가는 분쟁영토를 실효 지배하는 국가를 상대로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며 국내정치가 불안정해질수록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이처럼 본 연구의 통계 분석은 북한의 대남도발과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으나 동맹을 비롯한 다양한 주변국들과 관련된 변수를 포함하고 있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 통계모형에서 잠재적 분쟁개시국과 잠재적 분쟁타겟국이 서로 동맹 상대인지에 대해서는 변수화하였지만 두 국가 이외의 동맹관계로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현재 남북한 관계에서 북한의 동맹인 중국과 한국의 동맹인 미국이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며 일본과 러시아 역시 6자 회담의 참여국으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북한을 혈맹이자 전략적 자산으로 여기면서 실질적으로 북한경제를 지탱하는 역할을 맡고 있지만 근래에 들어 북한의 핵개발과 무력행위에 대해 반대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따라서 주변국들은 중국이 북한의 도발행위를 억제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여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58] 한편, 한미동맹은 북한의 전면적인 대남 도발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59] 북한의 핵개발과 중국의 부상으로 냉

전 이후에도 한국과 미국, 일본은 공동의 위협을 대응하는 안보동맹을 유지 ·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미중간 세력전이가 본격화되면서 동아시아에서 이른바 신냉전이 형성될 것을 예상할 때 남북한을 둘러싼 동맹에 기초한 지역질서는 북한의 대남도발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전망

위에서 요약한 본 연구의 발견은 북한의 대남 도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전망을 제시한다. 첫째, 북한 지도부는 국가이익보다 정권이익을 우선시하여 무력분쟁을 일으킬 것이다. 어떤 이들은 북한정권을 비이성적 결정을 내리는 예측 불가능한 집단으로 치부한다. 국민들은 굶어 죽어가는 상황에서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이기 보다 끊임없는 위기 조성을 일으키는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다. 하지만 권력세습과 경제실패로 정당성 확보가 어려운 김정은 정권에게 외부의 적을 통한 국내세력 결집은 아주 매력적인 정권유지 전술임에 틀림없다. 본 연구의 통계 분석에서도 잠재적 타겟국의 상대적 국력이 상승할 경우 국내정치안정을 보이는 국가는 분쟁을 덜 일으키지만 국내정치 불안정국가는 분쟁을 더 일으키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다

58- 국가는 동맹을 통하여 공동위협에 대처할 뿐 아니라 동맹상대국의 무력행위를 억제하여 위기와 전쟁을 예방하고자 한다. 동맹의 후자의 기능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Jeremy Pressman, *Warring Friends: Alliance Restraint in International Politic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8).

59- 동맹의 평화적 효과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Jesse C. Johnson and Brett Asley Leeds, "Defense Pacts: A Prescription for Peace," *Foreign Policy Analysis*, Vol. 7, No. 1 (2011), pp. 45~65.

른 나라의 상대적 국력이 상승할 경우 이는 세력균형의 부정적인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세력균형이론가들이 말한 바와 같이 국가 지도자는 자강(내적 균형) 혹은 동맹(외적 균형)을 통하여 균형의 회복을 추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지만 정치지도자가 자신의 권력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잠재적) 위협과 분쟁 혹은 위기를 조성하여 국익에 앞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일 것이다. 적어도 냉전의 종식과 김일성 사망 이후 권력의 정당성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북한 지도자에게 국익에 기반한 정치·경제·군사 정책을 기대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정치불안과 경제실패라는 국내 환경 속에서 국가는 무력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가장 높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치불안은 북한 지도부가 외부와의 갈등을 통한 내부 단결을 도모하는 전략을 고려하게 할 것이고, 경제실패로 남한과 세력격차가 심화된다면 북한 지도부는 점차로 강해지는 남한이라는 타겟을 상대로 분쟁을 일으켜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면서 능력을 증명하고자 할 것이다. 반대로, 정치안정과 경제개발이 이루어진다면 북한 지도부는 남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하여 성장과 변화의 동력을 찾고자 하겠지만 이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 김정은의 취약한 권력 정당성은 핵프로그램을 포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핵프로그램은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을 의미하며,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은 경제침체의 지속으로 연결된다. 비록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와 경제발전의 병진을 주장하고 나섰지만 이러한 군사와 경제 목적의 양립은 불가능하기에 북한 지도부는 당분간 정치불안과 경제실패 속에서 대외 도발을 통한 정권 안정을 추구할 것이다.

셋째, 현재의 남북 세력균형이 변하기보다는 유지될 수도 있겠지만 북한의 정치불안이 계속되는 한 북한의 대남 도발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와 '재균형(rebalancing)'

정책으로 북중관계가 개선되어 북중무역량과 중국의 대북한 원조가 증가할 가능성도 존재하며, 남한의 경제성장이 국내외적 요인으로 더디게 이루어진다면 냉전 직후 남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한 남북한 세력균형이 당분간 현상태를 유지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러나 북한의 정권안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북한지도부가 대남 도발을 통한 국내세력결집을 추구할 가능성은 상존한다. 더구나 장성택의 실각과 처형 이후 군부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집단간 권력투쟁이 지속되면 군인사들은 외교나 협상보다 무력을 통한 문제해결을 선호하고 과도한 집단간 충성경쟁 속에서 주요 인사들은 위험을 감수하기 때문에 무력 도발은 보다 빈번히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3. 정책적 고려사항

위의 전망에 기초하여 세 가지 정책적 고려사항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도발 가능성을 상정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했으며 2013년에 접어들면서 3대 세습체제가 안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등장하였다. 하지만 12월 9일 북한내 권력 2인자로 알려진 장성택을 '반당·반혁명 종파행위'를 이유로 숙청하고, 같은 달 12일 '국가전복음모행위'를 감행했다는 판결에 따라 처형을 실시한 사건 이후 북한내 국가기관들의 권력투쟁과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성을 주장하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60] 김정은의 권력

60- 이와 같은 의견으로는 다음을 참조. 박형중, "김정은 정권 2년과 장성택 실각, 그리고 2014년 북한 정세," 『남북관계의 진단과 해법』 (국회정책세미나, 2013.12.20); 현성일, "장성택 실각 이후 북한의 대내 정세 평가와 전망," 『장성택 실각 이후 북한 정세 평가와

이 공고하지 않다면 김정은은 내부적으로 숙청을 통하여 권력기반을 확고히 하고자 할 것이며 외부적으로 도발을 통하여 국내결집효과를 꾀할 것이다. 비록 김정은이 권력을 장악하였다 하더라도 이번 장성택 사건의 배후에 조직지도부와 군부의 연합이 존재했으며 향후 이권을 둘러싼 갈등이 예고되어 있기에 권력기관들 사이의 과도한 충성경쟁은 위험을 불사하는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어떠한 대비를 해야 하는가? 무엇보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응징을 가할 의지와 능력이 있음을 보여야 한다. 북한 지도부와 군부가 국내적 관심을 외부로 돌리면서 외교적 전과를 이루려고 한다해도 고강도 분쟁은 회피하고자 할 것이다. 고강도 분쟁의 경우 인적·물적 피해가 클 뿐 아니라 만약 패배하였을 경우 지도자의 위신과 권력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외부의 위협을 통하여 대내결집을 원한다면 저강도 분쟁의 대상자를 상대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 관심전환전쟁의 대표적 사례인 포클랜드 전쟁의 경우 아르헨티나 군부가 포클랜드 섬의 무력 점령에 대하여 영국 정부가 무력으로 반격을 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오판이 존재했다. 김정은 정권 역시 이러한 오판을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더구나 한국처럼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이면서 대외무역의존도가 높은 경우 무력분쟁으로 인한 정치적·경제적 비용이 크기 때문에 무력보복을 선택하지 않으리라는 예상을 유발할 수도 있다.[61] 따라서 한국은 북한에 대하여 무력분쟁 개시의 비용과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다는 명확한 신호를 사전에 보내는 작업을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전망』(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제41차 통일정책포럼, 2013.12.20).

61- Sung Chul Jung, “Searching for Nonaggressive Targets,”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2014).

둘째, 북한의 정치와 경제 상황이 종합적으로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고려해야 한다. 북한의 정치불안정은 오히려 북한 지도부로 하여금 내부 단속을 위해 남한을 비롯한 이웃국가들과 안정적 관계를 추구하게 한다는 예측도 존재한다. 제한된 자원을 국내문제에 집중하여 국내안정이라는 최우선 목표를 달성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통계분석에 따르면 국내불안은 해당 국가로 하여금 국력이 빠르게 상승하거나 분쟁영토를 지배 중인 국가를 상대로 분쟁을 일으키게 하는 효과가 있다. 이는 북한의 지도부가 현 상황에서 국내 청중들에게 '버터'를 통한 국내 안정을 위해 '총'을 통한 국내 결집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지 않음을 이야기한다. 김정은 정권이 내세운 병진론은 총과 버터를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전략이지만 체제 개혁과 개방 없이 경제성장이 어렵다는 것을 고려할 때 총을 통한 대내결집 노력은 중단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북한의 정치와 경제 상황을 연계하여 고려하면서 이들의 상호작용이 북한의 외교 전략에 어떻게 반영될지를 검토해야 한다.

셋째, 북한 지도부가 중국의 지원과 국제사회의 압력 속에서 전략적으로 취할 도발 유형을 예상해야 한다. 당분간 북한은 무력사용을 통한 고강도 분쟁보다는 위기조성에 머무르는 저강도 분쟁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 초에 북한이 실시한 핵실험의 경우도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실시되었다. 따라서 점차 중국 지도부의 대북한 인식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국제사회 뿐 아니라 중국 내부에서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모를 리 없는 북한이 계속하여 중국이 반대하는 핵실험을 비롯한 무력 도발을 감행하기는 힘들다고 예상된다. 그렇다면 북중 관계를 심대하게 훼손하지 않지만 내부 결집을 유도할 수 있는 위기 상황 조성을 북한 지도부가 선호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따라서 북한이 무력 사용으로 사상자를 발생시키는 것 뿐 아니라 무력 위협과 사이버 테러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도발에 대한 전략적이고 면밀한 준비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1. 단행본

리처드 에번스, 이영석 역. “제2장: 역사, 과학, 도덕.”『역사학을 위한 변론』. 서울: 소나무, 1998.

요나톤 모세스·투르뵨 크누트센, 신욱희 외 역.『정치학 연구방법론』. 서울: 을유문화사, 2011.

존 루이스 개디스, 강규형 역.『역사의 풍경』. 서울: 에코리브르, 2004.

최진욱·한기범·장용석.『김정은 정권의 정책전망: 정권 초기의 권력구조와 리더십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12-12. 서울: 통일연구원, 2012.

Allison, Graham T. and Philip Zelikow. *Essence of Decision: Explaining the Cuban Missile Crisis*. 2nd ed. New York: Longman, 1999(1971).

Brown, Michael E. *et al.* (ed.). *Primacy and Its Discontents: American Power and International Security.* Cambridge: MIT Press, 2009.

Elman, Colin and Miriam Fendius Elman (ed.). *Bridges and Boundaries: Historians, Political Scientists, and the Study of International Relations*. Cambridge: MIT Press, 2001.

Fravel, M. Taylor. *Strong Borders, Secure Nation: Cooperation and Conflict in China's Territorial Disput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8.

Hollis, Martin and Steve Smith. *Explaining and Understanding International Relation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Huth, Paul K. and Todd L. Allee. *The Democratic Peace and Territorial Conflict in the Twentieth Centur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Keohane, Robert O. *After Hegemony: Cooperation and Discord in the World Political Economy*. first Princeton classic ed.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5(1984).

Levy, Jack S. and William R. Thompson. *Causes of War.* Malden, MA: Wiley-Blackwell, 2010.

Marshall, Monty G. and Keith Jaggers. *Polity IV Project: Political Regime Characteristics and Transitions, 1800-2002.* Version p4v2002e. College Park: Center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Conflict Management, 2002.

Mearsheimer, John J.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ew York: Norton, 2001.

Midlarsky, Manus I. (ed.). *Handbook of War Studies II.*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0.

Oneal, John R. and Bruce Russett. *Triangulating Peace: Democracy, Interdependence,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New York: Norton, 2001.

Organski, A. F. K. and Jacek Kugler. *The War Ledge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0.

Pressman, Jeremy. *Warring Friends: Alliance Restraint in International Politic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8.

Tammen, Ronald L. *et al. Power Transitions: Strategies for the 21st Century*. New York: Chatham House Publishers, 2000.

Van Evera, Stephen. *Guide to Methods for Students of Political Scienc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7.

Vasquez, John A. and Colin Elman. *Realism and the Balancing of Power: A New Debate*. Upper Saddle River: Prentice Hall, 2003.

Walt, Stephen M. *The Origins of Allianc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7.

Waltz, Kenneth N. *Man, the State, and War: A Theoretical Analysi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9.

_____.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Reading: Addison-Wesley, 1979.

2. 논문

박영호. “남북관계의 현황과 전망: 2013-2014.”『남북관계의 진단과 해법』. 국회정책세미나, 2013.12.20.

박형중. “김정은 정권 2년과 장성택 실각, 그리고 2014년 북한 정세.”『남북관계의 진단과 해법』. 국회정책세미나, 2013.12.20.

정성철. “관심전환전쟁이론: 논리와 근거.”『한국정치학회보』. 47집 5호, 2013.

현성일. “장성택 실각 이후 북한의 대내 정세 평가와 전망.”『장성택 실각 이후 북한 정세 평가와 전망』.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제41차 통일정책포럼, 2013.12.20.

Beck, Nathaniel, Jonathan N. Katz, and Richard Tucker. “Taking Time Seriously: Time-Series-Cross-Section Analysis with a Binary Dependent Variabl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42, No. 4, 1998.

Bennett, D. Scott and Allan C. Stam. “EUGene: A Conceptual Manual.” *International Interactions* 26 (http://eugenesoftware.org, 2000).

Berry, William, Matt Golder, and Daniel Milton. “Improving Tests of Theories Positing Interaction.” *Journal of Politics*. Vol. 74, No. 3, 2012.

Brambor, Thomas, William Roberts Clark, and Matt Golder. “Understanding Interaction Models: Improving Empirical Analyses.” *Political Analysis*. Vol. 14, No. 1, 2006.

Braumoeller, Bear F. “Hypothesis Testing and Multiplicative Interaction Term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58, No. 4, 2004.

Bremer, Stuart A. “Dangerous Dyads: Conditions Affecting the Likelihood of Interstate War, 1816-1965.”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36, No. 2, 1992.

Bremer, Stuart, Faten Ghosn, and Glenn Palmer. “The MID3 Data Set, 1993-2001: Procedures, Coding Rules, and Description.” *Conflict Management and Peace Science*. Vol. 21, No. 2, 2004.

Correlates of War Project. “Direct Contiguity Data: 1816-2006.” Version 3.1. Online, <http://correlatesofwar.org (2006)>.

Correlates of War Project. “State System Membership List.” v2008.1. Online, <http://correlatesofwar.org (2008)>.

DiCicco, Jonathan M. and Jack S. Levy. “Power Shifts and Problem Shifts: The Evolution of the Power Transition Research Program.”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43, No. 6, 1999.

Farber, Henry S. and Joanne Gowa. “Polities and Peace.” *International Security*. Vol. 20, No. 2, 1995.

Friedrich, Robert J. “In Defense of Multiplicative Terms in Multiple Regression Equation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26, No. 4, 1982.

Gartzke, Erik. “The Capitalist Peac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51, No. 1, 2007.

Gelpi, Christopher. “Democratic Diversions: Governmental Structure and the Externalization of Domestic Conflict.”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41, No. 2, 1997.

Gibler, Douglas M. and Meredith Sarkees. “Measuring Alliances: The Correlates of War Formal Interstate Alliance Dataset, 1816-2000.”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41, No. 2, 2004.

Grieco, Joseph M. “Anarchy and the Limits of Cooperation: A Realist Critique of the Newest Liberal Institutionalism.”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2, No. 3, 1988.

Hegre, Havard, John R Oneal and Bruce Russett. “Trade Does Promote Pace: New Simultaneous Estimates of the Reciprocal Effects of Trade and Conflict.”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47, No. 6, 2010.

Huth, Paul K., Sarah E. Croco and Benjamin J. Appel. “Does International Law Promote the Peaceful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isputes? Evidence from the Study of Territorial Conflicts since 1945.”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105, No. 2, 2011.

Johnson, Jesse C. and Brett Asley Leeds. “Defense Pacts: A Prescription for Peace.” *Foreign Policy Analysis*. Vol. 7, No. 1, 2011.

Jung, Sung Chul. “Foreign Targets and Diversionary Conflict.”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doi: 10.1111/isqu.12087, 2013).

_____. “Searching for Nonaggressive Targets.”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2014.

Kisangani, Emizet F. and Jeffrey Pickering. “Diverting with Benevolent Military Force: Reducing Risks and Rising above Strategic Behavior.”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51, No. 2, 2007.

Kisangani, Emizet F. and Jeffrey Pickering. “The Dividends of Diversion: Mature Democracies’ Proclivity to Use Diversionary Force and the Rewards They Reap from It.”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39, No. 3, 2009.

Kisangani, Emizet F. and Jeffrey Pickering. “Democratic Accountability and Diversionary Force: Regime Types and the Use of Benevolent and Hostile Military Forc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55, No. 6, 2011.

Levy, Jack S. “The Diversionary Theory of War: A Critique.” in Manus I. Midlarsky (ed.). *Handbook of War Studies*. Boston: Unwin Hyman, 1989.

Licklider, Roy. “How Do We Know What We Know?.” in Edward Rhodes and Jonathan DiCicco (eds.). *International Relations: Introductory Readings*. third revised printing. Dubuque, Kendall/Hunt, 2006.

Meernik, James D. and Peter Waterman. “The Myth of the Diversionary Use of Force by American Presidents.”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Vol. 49, No. 3, 1996.

Miller, Ross A. “Domestic Structure and the Diversionary Use of Forc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39, No. 3, 1995.

Miller, Ross A. and Özlem Elgün. “Diversion and Political Survival in Latin America.”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55, No. 2, 2011.

Mitchell, Sara McLaughlin and Brandon C. Prins. “Rivalry and Diversionary Use of Forc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48, No. 6, 2004.

Mitchell, Sara McLaughlin and Clayton L. Thyne. “Contentious Issues as Opportunities for Diversionary Behavior.” *Conflict Management and Peace Science*. Vol. 27, No. 5, 2010.

Rummel, Rudolph J. “Dimensions of Conflict Behavior within and between Nations.” *General Systems Yearbook*. VIII, 1963.

Singer, J. David. “The Level-of-Analysis Problem in International Relations.” *World Politics*. Vol. 14, No. 1, 1961.

Singer, J. David, Stuart Bremer, and John Stuckey. “Capability, Distribution, Uncertainty, and Major Power War, 1820-1965.” in Bruce M. Russett (ed.). *Peace, War, and Numbers*. Beverly Hills: Sage, 1972.

Tarar, Ahmer. “Diversionary Incentives and the Bargaining Approach to War.”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50, No. 1, 2006.

Waltz, Kenneth N. “The Stability of a Bipolar World.” *Daedalus*. Vol. 93, No. 3, 1964.

_____. “The Myth of National Interdependence.” in Charles P. Kindleberger (ed.). *The International Corporation*. Cambridge: MIT Press, 1970.

3. 기타자료

Databanks International. “User’s Manual: Cross-National Time-Series Data Archive.” <http://www.databanksinternational.com/32.html>.

『연합뉴스』.

『조선일보』.

최근 발간자료 안내

연구총서

2011-01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와 북한 핵문제	전성훈	14,500원
2011-02	북한군의 기강 해이에 관한 연구	이교덕 외	11,000원
2011-03	통일 진입과정에서의 북한 재건 방향	최진욱, 김진하	5,500원
2011-04	북한의 부문별 조직실태 및 조직문화 변화 종합연구	정영태	16,000원
2011-05	북한형사재판제도 연구: 특징과 실태	이규창, 정광진	8,000원
2011-06	북한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인식	김수암 외	12,000원
2011-07	한반도 평화와 북한 비핵화: 협력적 위협감축(CTR)의 적용방안	박종철 외	10,000원
2011-08	대북한 핵협상 전략구상방향	홍우택 외	6,000원
2011-09	중국의 부상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허문영, 마민호	10,000원
2011-10	북한 핵의 국제정치와 한국의 대북 핵전략	배정호 외	11,000원
2011-11	평화통일을 위한 통일외교 전략	박영호 외	13,500원
2011-12(Ⅰ)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1부	황병덕 외	15,500원
2011-12(Ⅱ)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2부	황병덕 외	13,500원
2011-12(Ⅲ)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3부	황병덕 외	18,000원
2012-01	미국의 對韓 핵우산정책에 관한 연구	전성훈	14,000원
2012-02	북한부패와 인권의 상관성	김수암 외	11,000원
2012-03	보호책임(R2P) 이행에 관한 연구	이규창 외	11,000원
2012-04	EC/EU사례분석을 통한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추진방안: 유럽공동체 형성기를 중심으로	손기웅 외	14,000원
2012-05	김정은체제의 권력엘리트 연구	이교덕 외	13,000원
2012-06	독재정권의 성격과 정치변동: 북한 관련 시사점	박형중 외	11,000원
2012-07	북방삼각관계 변화와 지속: 북한의 균형화 전략을 중심으로	허문영, 유동원, 심승우	10,000원
2012-08	북한 핵문제의 전망과 대응책: 정책결정모델(Decision Making Model)을 이용한 전략 분석	홍우택	8,000원
2012-09	중국의 한반도 관련 정책연구기관 및 전문가 현황분석	전병곤, 양갑용	6,000원
2012-10	2000년대 대북정책 평가와 정책대안: '동시병행 선순환 모델'의 원칙과 과제	박종철 외	12,500원
2012-11	리더십교체기의 동북아 4국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 변화와 한국의 통일외교 전략	배정호 외	11,500원
2012-12	김정은 정권의 정책전망: 정권 초기의 권력구조와 리더십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최진욱, 한기범, 장용석	7,500원
2012-13	신정부 '국가전략 DMZ 평화적 이용'	손기웅 외	8,000원
2013-01	남북러 가스관과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지정학	이기현 외	6,000원
2013-02	한국의 FTA전략과 한반도	김규륜 외	8,500원
2013-03	김정은 체제의 변화 전망과 우리의 대책	박종철 외	10,000원

2013-04	EC/EU사례분석을 통한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추진방안 - EC기 분석을 중심으로 -	손기웅 외	12,000원
2013-05	오바마·시진핑 시대의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과 한국의 대북 및 통일외교	배정호 외	11,000원
2013-06	북한사회 위기구조와 사회변동전망: 비교사회론적 관점	조한범, 황선영	6,000원
2013-07	인도적 지원을 통한 북한 취약계층 인권 증진 방안 연구	이규창 외	12,500원
2013-08	새로운 세대의 탄생: 북한 청소년의 세대경험과 특성	조정아 외	15,000원
2013-09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책 연구	홍우택	6,000원
2013-10	북한에서 국가재정의 분열과 조세 및 재정체계	박형중, 최사현	7,000원

학술회의총서

2011-01	한반도 통일비전과 국제협력	4,000원
2011-02	북한인권 실상과 효율적 개입방안	8,500원
2012-01	The Outlook for the North Korean Situation & Prospects for U.S.-ROK Cooperation After the Death of Kim Jong-il	6,000원
2012-02	김정은 체제의 북한 인권문제와 국제협력	19,000원
2012-03	해외 이주·난민 지원제도의 시사점	12,000원
2013-01	유엔 인권메커니즘과 북한인권 증진방안	20,000원
2013-02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추진전략	19,000원

협동연구총서

2011-14-01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4,500원
2011-14-02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상)	황병덕 외	13,000원
2011-14-03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중)	황병덕 외	12,000원
2011-14-04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하)	황병덕 외	13,500원
2011-15-01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연구: 국제사회의 경험 분석(총괄보고서)	임강택 외	11,000원
2011-15-02	부패의 개념과 실태 및 반부패 개혁	박형중 외	10,000원
2011-15-03	체제전환국의 시장-민주제도 건설 지원	박영호 외	13,000원
2011-15-04	국제사회의 개발지원전략과 협력체계 연구	장형수 외	9,500원
2011-15-05	수원국의 역량발전을 위한 개발협력전략과 사례연구	이종무 외	9,500원
2011-15-06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사례와 시사점	이상준 외	9,000원
2012-11-01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실행방안(총괄보고서)	임강택 외	11,000원
2012-11-02	북한 부패실태와 반부패 전략: 국제협력의 모색	박형중 외	10,000원
2012-11-03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체계 구축 및 개발지원전략 수립 방안	장형수 외	8,000원
2012-11-04	북한의 역량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이종무 외	8,000원
2012-11-05	북한의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프로그램 추진방안	이상준 외	8,000원

2012-12-01 한반도 통일 공공외교 추진전략(I) - 공공외교의 이론적 조명과 한반도 주변4국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3,500원
2012-12-02 공공외교의 이론적 조명과 주변4국의 한반도통일 공공외교 분석틀 김규륜 외 8,500원
2012-12-03 미국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박영호 외 9,500원
2012-12-04 중국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이교덕 외 7,500원
2012-12-05 일본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이진원 외 8,000원
2012-12-06 러시아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여인곤 외 7,500원
2013-26-01 한반도 통일 공공외교 추진전략(II) - 한국의 주변4국 통일공공외교의 실태 연구(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4,000원
2013-26-02 한국의 對미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박영호 외 8,000원
2013-26-03 한국의 對중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전병곤 외 7,500원
2013-26-04 한국의 對일본 통일 공공외교 실태 이기태 외 8,000원
2013-26-05 한국의 對러시아 통일 공공외교 실태 조한범 외 6,000원

논 총

통일정책연구, 제21권 1호 (2012)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1, No. 1 (2012)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1권 2호 (2012)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1, No. 2 (2012)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2권 1호 (2013)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2, No. 1 (201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2권 2호 (2013)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2, No. 2 (2013) 10,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10 박영호 외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0 박영호 외 20,000원
북한인권백서 2011 김국신 외 17,5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1 김국신 외 17,500원
북한인권백서 2012 김수암 외 19,5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2 손기웅 외 23,500원
북한인권백서 2013 조정현 외 24,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3 조정현 외 23,000원

기 타

2011	통일대비를 위한 북한변화 전략(통일대계연구 2011-01-1)	박형중 외	17,000원
2011	북한변화를 위한 한·중 협력방안(통일대계연구 2011-01-2)	임강택 외	6,500원
2011	남북 친화력 확대 방안(통일대계연구 2011-02)	조 민 외	6,000원
2011	통일대비를 위한 국내과제(통일대계연구 2011-03)	박종철 외	13,000원
2011	통일외교 과제와 전략(통일대계연구 2011-04)	최진욱 외	13,000원
2011	US-China Relations and Korean Unification(Grand Plan for Korean Unification 2011-05)	최진욱 편저	12,000원
2011	통일 비용·편익 연구의 새로운 접근: 포괄적 연구요소의 도입과 대안의 모색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11-01)	김규륜 외	19,000원
2011	체제전환 비용·편익 사례연구(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11-02)	조한범 외	10,500원
2011	통일 비용·편익 추계를 위한 북한 공식경제부문의 실태연구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11-03)	임강택 외	9,500원
2011	2011년 통일예측시계구축	박영호, 김형기	8,000원
2011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4국의 입장과 역할	배정호 외	6,500원
2011	Korean Unification and the Positions and Roles of the Four Neighboring Powers	배정호 편	8,000원
2011	중국의 부상에 따른 동북아 전략환경의 변화와 한반도	배정호 편	12,000원
2011	2011 Unification Clock: When will We See a Unified Korea?	Park Young-Ho, Kim Hyeong Ki	4,000원
2011	알기쉬운 통일교육 12주제	허문영 외	35,000원
2012	탈북자 관련 국제조약 및 법령	이규창 외	19,500원
2012	북한인권 이해의 새로운 지평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20,500원
2012	알기쉬운 통일교육: 해외한인용	허문영 외	30,000원
2012	통일대비를 위한 대북통일정책 모색(통일대계연구 12-01)	박형중 외	15,000원
2012	통일한국에 대한 국제적 우려해소와 편익: 지역 및 주변국 차원 (통일대계연구 12-02)	박종철 외	14,000원
2012	Korean Unification and a New East Asian Order (Grand Plan for Korean Unification 12-03)	최진욱 편저	6,000원
2012	Korean Peninsula Division/Unification: From the International Perspective	Kim Kyuryoon, Park Jae-Jeok	13,000원
2012	중국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과 주요 국가들의 대중국 전략	배정호, 구재회 편	22,000원
2012	China's Domestic Politics and Foreign Policies and Major Countries' Strategies toward China	Bae Jung-Ho, Ku Jae H.	22,500원
2012	통일 비용·편익의 분석모형 구축(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2-1)	김규륜 외	11,500원
2012	'선도형 통일'의 경로와 과제(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2-2)	김규륜 외	9,000원
2013	유엔 인권메커니즘과 북한인권	북한인권사회연구센터 편	18,000원
2013	중국 시진핑 지도부의 구성 및 특징 연구 (중국 지도부의 리더십 분석과 한중정책협력방안 2013)	전병곤 외	9,000원

2013 통일 이후 통합을 위한 갈등해소 방안: 사례연구 및 분야별 갈등해소의 기본방향
박종철 외 13,000원
2013 한반도 통일에 대한 동북아 4국의 인식(통일외교 컨텐츠 생산(1))
배정호 외 16,500원
2013 알기 쉬운 통일교육III: 북한이탈주민용 조정아 외 11,000원
2013 알기 쉬운 통일교육III: 북한이탈주민용 수업지침서 조정아 외 6,000원
2013 민주화 및 양질의 거버넌스 수립: 북한 변화와 통일을 위한 시사점
(통일대계연구 13-01) 박형중 외 13,500원
2013 시장화 및 빈곤감소형 경제질서 수립: 북한 변화와 통일을 위한 시사점
(통일대계연구 13-02) 임강택 외 12,500원
2013 통일대계연구: 4년 연구 종합논의
(통일대계연구 13-04) 박형중 외 8,000원
2013 정치·사회·경제 분야 통일 비용·편익 연구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3-1) 조한범외 17,500원
2013 The Attraction of Korean Unification: Inter-Korean and International Costs and Benefits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3-2) 김규륜 외 15,500원
2013 한반도 통일의 미래와 주변 4국의 기대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3-3) 김규륜 외 10,500원
2013 전환기 중국의 정치경제
(통일대비 중국에 대한 종합적 전략 연구: 통일시대 한중관계 전망 2013-1)
배정호 외 15,500원
2013 China's Internal and External Relations and Lessons for Korea and Asia
(통일대비 중국에 대한 종합적 전략 연구: 통일시대 한중관계 전망 2013-2)
Bae Jung-Ho, Ku Jae H. 17,500원
2013 중국의 대내외 관계와 한국의 전략적 교훈
(통일대비 중국에 대한 종합적 전략 연구: 통일시대 한중관계 전망 2013-3)
배정호, 구재회 편 16,500원

연례정세보고서

2011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1~2012 6,000원
2012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2~2013 7,000원
2013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3~2014 7,000원

◈ 비매품 ◈

통일정세분석

2011-01 2011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최진욱 외
2011-02 미·중 정상회담의 의미와 한국의 전략적 고려사항 배정호 외
2011-03 2011년 미·중 정상회담 평가: 동북아 및 한반도에의 함의 황병덕 외
2011-04 2009년 헌법 개정 이후 북한 노동법제 동향 이규창

2011-05 최근 북한 주민의 의식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임순희
2011-06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4차 회의 결과 분석 임강택, 최진욱
2011-07 중동 민주화 혁명과 한반도 전략적 함의 배정호, 박영호, 박재적, 이기현
2011-08 북한의 여성권·아동권 관련 법 제정 동향 임순희, 김수암, 이규창
2011-09 상반기 북한정세 분석 보고서 최진욱 외
2012-01 2012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최진욱 외
2012-02 북한의 아동교육권 실태와 관련 법령 제정 동향 임순희, 조정아, 이규창
2012-03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배정호 외
2012-04 제4차 당대표자회와 제12기 제5차 최고인민회의 분석 박형중 외
2012-05 최근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동향 이금순, 한동호
2013-01 2013년 북한 신년사 집중분석 전성훈 외
2013-02 3차 핵실험 이후 김정은 정권의 대내외 정책 전성훈 외
2013-03 시진핑 체제의 출범과 대내외정책 방향: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결과분석 전병곤, 이기현
2013-04 북한 3차 핵실험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 논의 동향 박형중, 박영호, 김동수
2013-05 대북경제제재에 대한 북한의 반응과 대북정책에의 함의 임강택
2013-06 한미정상회담 결과 분석 김규륜 외
2013-07 한중정상회담 결과 분석 이기현
2013-08 김정은 정권의 대내외 정책평가와 우리의 대응방향 박영자
2014-01 2014년 북한 신년사 집중분석 박형중 외

KINU정책연구시리즈

2011-01 재스민혁명의 분석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박종철 외
2011-02 창지투(長吉圖) 선도구와 북한나선특별시, 러시아 극동지역 간 경제협력 과제 림금숙
2011-03 6자회담과 남북관계: 전망과 대책 박종철 외
2011-04 보호책임(R2P)의 이론 및 실행, 그리고 한반도에의 함의:
리비아 및 코트디부아르 사태를 중심으로 조정현
2011-05 남북러 가스관 사업의 효과, 쟁점, 과제 이윤식
2011-06 DMZ 총람: 개요, 정치·군사적 현황 손기웅 외
2011-07 DMZ 평화적 이용의 국가적 의미 손기웅 외
2012-01 통일재원 마련 및 통일의지 결집 관련 국민의 인식 김규륜, 김형기
2012-02 2012년 상반기, 북한 정책동향 분석: 북한 매체의 논조를 중심으로 박형중 외
2012-03 러시아의 극동개발과 북한 노동자 이영형
2012-04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 한반도 정책 전망 김장호 외
2012-04(E) The Second Term Obama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s the Korean Peninsula
Jangho kim
2012-05 중국 18차 당대회 분석과 대내외정책 전망 이기현 외
2013-01 북한 지하자원을 활용한 DMZ/접경지역 남북 산업단지 조성방안 손기웅 외
2013-02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방향 최진욱 외
2013-03 박근혜정부의 통일외교안보 비전과 추진 과제 최진욱 외
2013-04 유엔조사위원회(COI) 운영 사례 연구 김수암 외

2013-05	Trustpolitik: 박근혜정부의 국가안보전략 – 이론과 실제 탐색연구 –	박형중 외
2013-06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	안지호 외
2013-07	2013년 북한 정책 논조 분석과 평가	박형중 외
2013-08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업그레이드를 위한 2014년 대북정책 추진전략	최진욱 외
2013-09	김정은 정권의 대남 긴장조성: 2013년과 향후 전망	박영자 외
2013-10	국내불안과 대외도발: 북한에 대한 적용 가능성 탐색	정성철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2011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6권 1호	김수암, 전현준, 이규창
2011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6권 2호	김수암, 김국신, 이규창
2012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7권 1호	손기웅 외
2012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7권 2호	손기웅 외
2013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8권 1호	이금순 외
2013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8권 2호	이금순 외

Study Series

2011-01	A New Approach to the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Formula	Park Jong Chul, Hong Woo Taek, Lee Kyu Chang, Kim Philo, Chun Chae Sung, Cho Seong Ryoul, Hong Ihk Pyo, Hwang Sun Hye
2012-01	Study of Disciplinary Problems in the North Korean Army	Lee Kyo Duk, Chung Kyu Sup
2012-02	The Quality of Life of North Korean: Current Status and Understanding	Kim Soo Am et al.
2012-03	Basic Reading on Korean Unification	Huh Moon Young et al.
2013-01	Study on the Power Elite of the Kim Jong Un Regim	Lee Kyo Duk et al.
2013-02	Relations between Corruption and Human Rights in North Korea	Kim Soo Am et al.
2013-03	Easing International Concerns over a Unified Korea and Regional Benefits of Korean Unification	Park Jong Chul et al.
2013-04	'Peaceful Utilization of the DMZ' as a National Strategy	Son Gi Woong et al.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 종사자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총서, 협동연구총서, 통일정세분석 등 우송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라) 구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가) 주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출판자료팀 도서회원 담당자(books@kinu.or.kr)
나) 전화: (02)901-2559, FAX: (02)901-2547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변경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신청서

<table>
<tr><td rowspan="2">성 명</td><td colspan="2" rowspan="2"></td><td>입금일자</td><td></td></tr>
<tr><td>입금자
(가입자와
입금자가 다를
경우 기입)</td><td></td></tr>
<tr><td>소속</td><td colspan="4"></td></tr>
<tr><td>간 행 물
받을 주소</td><td colspan="4">(우편번호 :)</td></tr>
<tr><td rowspan="2">연 락 처</td><td>전 화</td><td></td><td>E-Mail</td><td></td></tr>
<tr><td>핸드폰</td><td></td><td>FAX</td><td></td></tr>
<tr><td>Mailing
Service</td><td colspan="4">수신 ( ) 수신거부 ( )</td></tr>
<tr><td>회원구분</td><td colspan="4">학생회원 ( ) 일반회원 ( ) 기관회원 ( )</td></tr>
<tr><td colspan="5">본인은 통일연구원의 연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td></tr>
</table>

※ 본 신청서를 보내주십시오.
(우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 (02)901-2559, FAX: (02)901-2547 E-Mail: books@kinu.or.kr

※ 신한은행 온라인 140-002-389681 (예금주: 통일연구원)

KINU 정책연구시리즈 13-10

국내불안과 대외도발: 북한에 대한 적용 가능성 탐색

KINU 통일연구원
www.kinu.or.kr

93340
9 788984 797567
ISBN 978-89-8479-756-7